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육지언론’의 제주 4·3 현장취재 기사 분석

이 소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2024년 2월



‘육지언론’의 제주 4·3 현장취재 기사 분석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소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지도교수 최 낙 진

이소진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안 도 현 

위 원 고 영 현 

위 원 최 부 진 

‘육지언론’의 제주 4·3 현장취재 기사 분석

이 소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 4·3의 현장을 직접 보고, 취재 보도한 육지언론 기사를 통하여 육지 기자들이 제주 4·3을 어떻게 인식하고 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제주 현장취재가 확인된 1946년 후반기부터 1950년까지 제주 현지 취재기를 게재한 언론사 12 곳과 기사 69건이다. 1948년 4·3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4·3의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육지언론의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당시 언론사의 인식 변화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는 내용분석 위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는 중립 또는 좌익 계열의 신문만이 제주를 현장 취재하였으나, 1948년 4·3 발발 직후부터는 좌익과 우익과 같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언론사에서 제주에 특파원을 보냈다. 그만큼 4·3 의제는 육지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둘째, 육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기사 내 정보원의 관계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익과 좌익계열의 언론사 모두에서 군·경 등의 ‘당국 관계자’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기사가 존재하는 반면, 그 반대의 기사도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좌익계열의 언론사가 토벌대를 찬양하기도 하였고, 우익 계열의 언론사가 도민을 구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좌익계열 언론사와 우익 계열 언론사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육지언론은 4·3 당시 당국의 토벌 활동을 대변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무고한 제주 양민들의 상황을 육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기자들의 활동도 확인되었다.

키워드 : 제주, 4·3, 육지언론, 현장취재, 언론 보도

목 차

I. 서론	1
II. 선행연구 고찰	5
1. 제주4·3 당시 제주 언론 상황	5
1) 광복 이전 제주 취재와 보급	5
2) 제주언론의 출현과 4·3 속 부침	8
2. 제주4·3 연구 현황과 고찰	13
3. 제주4·3 보도 연구 현황 및 경향	17
3. 프레임 연구	24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6
1. 연구문제	26
2. 분석자료 선정	26
3. 연구방법	31
4. 신뢰도 검증	35

IV. 연구결과	36
1. 육지언론사 정치적 성향 및 보도 비교	36
1)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36
2)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시기별 보도 차이	43
3) 시기별 보도 분석	44
2. 현장취재 보도의 내용분석	46
3. 육지언론사의 시기별 현장취재 특성	54
V. 결론 및 함의	75

I. 서론

제주에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이 등장한 것은 1945년 10월 1일 『濟州民報(이하 제주민보)』가 발행되면서부터다.¹⁾ 앞서 1945년 7월 『濟州新報(이하 제주신보²⁾)』가 있었지만, 일본어로 제작되었다. 또한, 『제주신보¹⁾』는 총독부 또는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의 지령을 받고, 특별한 제작, 배포한 기관지 중 하나였다.³⁾ 즉, 도민을 대상으로 전쟁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선무선동 심리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임시로 발간했던 기관지다.⁴⁾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인이 제작하고, 우리말이 담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신문의 탄생은 『제주민보』의 창간으로 보겠다.

창간 초기 『제주민보』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기사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며, 나름의 지역신문 역할을 해냈다. 창간호에는 미군 진주와 미군 사령관 파우엘 대령과의 회견, 일본군 모리오카(森岡) 작전참모와의 회견을 담았다.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장 방안도 촉구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철수 일자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간호는 200부에서 300부 가량 인쇄되어 사람들이 오가는 오일장 길거리에서 뿌려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⁵⁾ 하지만, 머지않아 『제주민보』는 경영자금 부족으로 신문 용지조차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경영책임자 金鎭洙(김진수)를 영입하고 1946년 1월 26일 제호를 『제주민보』에서 『제주신보』로 바꾸었으며, 1947년 1월

1) 이문교 『제주언론사』, 2007. 126쪽.

이문교는 『제주민보』가 아닌 『제주신보』라고 표기했지만, 창간 당시 제호는 『제주민보』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주민보』에서 『제주신보¹⁾』로 제호로 바꾼 이유는 “창간 며칠 전까지 발행되었던 진중신문의 제호가 『제주신보』이었기 때문에 軍報(군보)와 차별화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발행하는 민주 매체라는 뜻을 담아 『제주민보』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1945년 7월 발행된 『제주신보』를 『제주신보¹⁾』로 표기하였다. 향후 『제주민보』가 제호를 바꿔 발행한 신문 『제주신보』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3) 고영철 『제주언론 돌아보기 I』, 2019. 62쪽.

4) 고영철, 앞의 책, 96쪽. 고영철은 제주신보의 『제주신보50년사(276-277쪽)』와 이문교의 『제주언론사(126쪽)』에서 밝힌 “『제주신보¹⁾』는 진중신문”이라는 점을 반박하였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일본군 제58 사령부의 주도 아래 창간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공식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신문제작 주체가 군인이고, 신문의 주요 배포대상이 군인이어야 한다는 진중신문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확한 창간일과 중간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즉, 진중신문이 아닌 총독부의 기관지라는 것이다. 고영철은 앞으로 이 초기 제주 언론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95-98쪽)

5)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 1995. 276-277쪽.

지방유지들을 주주로 영입하는 주식회사로 개편하면서 운영을 점차 개선시켜 나갔다.⁶⁾ 하지만, 제주언론도 4·3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제주 4·3⁷⁾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침을 겪으며 토벌대에게 운영권을 빼앗기고 신문이 소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당시 제주 유일한 지역신문인 『제주신보』의 소실 기간은 계엄령이 선포(1948년 11월 7일)와 제주도 초토화 작전(1948년 11월 13일) 후인 1948년 12월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3월까지 총 16개월⁸⁾이다. 이른바 ‘제주지역 언론의 공백기’다. 이러한 제주언론사(史)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4·3의 전체 기간은 7년 7개월이다. 1947년 3월 1일 3·1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가 그 기간이다.⁹⁾ 4·3의 전체 기간에 빗대어 볼 때, 지역신문의 공백기는 4·3 시기 중 가장 중요하였던 초기 기록이 삭제된 것과 다르없다. 이 기간을 대체할 유일한 언론 보도는 ‘육지¹⁰⁾언론’에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육지언론 보도’에서 제주 4·3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고,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육지언론의 4·3 시기 기사 가운데서도 현장취재 보도에 집중하였다. 취재의 기본이자 핵심은 현장취재다.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뉴스

6) 이문교, 앞의 책, 128쪽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는 ‘4·3사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주4·3’ 또는 ‘4·3’으로 부르겠다. ‘제주4·3’은 그동안 폭동, 반란, 항쟁, 봉기 등 시대별로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제대로 된 정명(正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라는 단어 사용에도 논란은 많다. ‘사건’이라는 무미건조한 단어가 4·3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본질을 모두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172쪽)에서는 서북청년단이 『제주신보』를 강제 접수한 시기를 2연대 주둔기인 1949년 2월 혹은 3월 초순경으로 보았다.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용수씨의 증언을 보면, 김호진 편집국장이 뼈라사건으로 처형된 후, 송요찬 연대장이 군 작전 홍보를 위하여 신문이 정상가동되길 위해서 기자 경력을 가진 김용수 본인을 찾아왔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한 기간을 알기 위하여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2003)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43-44쪽에도 쓰여있다.

10) ‘육지(陸地)’는 섬에 상대해 대륙과 연결된 땅을 의미한다.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제주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주 밖의 물을 모두 ‘육지’라 한다. 즉 ‘육지언론’은 ‘육지’와 ‘언론’이라는 두 명사를 붙인 말로, 제주 섬 밖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언론을 통칭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연구’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육지언론’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제주와 육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하나의 요소가 육지에서 바라본 4·3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가 된 4·3 현장기사들에서도 ‘육지와 다르게’ ‘육지에서 보지 못한 풍경’ ‘육지로부터’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육지’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현장취재이며, 이러한 취재 활동을 통하여 나온 기사가 현장 보도 기사다. 모든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실에 가장 가까운 기사를 쓸 수 있다. 경찰에 비유하자면 초동수사인 셈이다. 물론, 자료를 확보한 후 작성하는 간접 취재 방식도 엄연한 취재 방식이지만, 현장취재가 원칙이다.¹¹⁾ 즉, 기자가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한 기사를 분석하면서 4·3과 관련한 문제적 사실을 기자가 어떻게 전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4·3 보도에 대한 불신은 미군정과 김·경과 같은 중간 정보제공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즉, 기자의 ‘현장 체험기’이자 ‘목격담’인 현장기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4·3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는 4·3 보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언론은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낳은 엄청난 범죄 세력에 협조(이관열, 2003)하였으며,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만 맞게끔 보도하였고,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조유정, 2019)고 힐난하고 있다. 4·3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이유는 언론학적으로 4·3을 제대로 탐구한 연구가 드문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3을 소재로 첫 학위를 받은 해가 1985년이다. 2023년 기준, 39년이 되었으며, 역사학을 비롯해 문화예술학, 사회학, 법학, 여성학 등 매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4·3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인 4·3융합전공 과정이 신설¹²⁾되면서, 학문적 연구가 더욱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4·3 보도 연구는 1994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4·3 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을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본 연구자는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언론학 관점에서의 4·3 보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학적 분석은 단순히 언론을 대변하고 옹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념논쟁에 또 다른 불을 지피자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되

11) 오정국 『현장취재에서 기사 작성까지-미디어 글쓰기』, 2013, 79-81쪽

12) 원소정(2023.08.04) “제주 4.3 석·박사 양성된다...제주대 대학원 ‘4.3 융합전공’ 신설”, 제주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819>)

고 있기에, 4·3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에 따라 3기로 나눠 시기별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1기(1946년)는 광복 직후 ‘동양의 지브롤터화’ 소문으로 제주지역 내 민심이 흉흉해지던 때다. 2기(1947년)는 3·1절 발포사건과 총파업이 이뤄졌던 시기다. 3기(1948-1950년)는 4·3 발발 직후부터 계엄령 해제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취재와 보도 시기의 구분은 4·3 현장 보도를 보다 다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납적 방법을 활용한 뉴스 프레임을 추출해 언론사별 그리고 시기별 보도의 의제 변화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성을 추적하였다. 궁극적으로 4·3 전후 보도를 탐구하는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제주4·3 보도 연구’의 필요성을 확장하고, 제주 언론사의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제주언론 근대사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제주4·3 당시 제주 언론 상황

1) 광복 이전 제주 취재와 보급

제주도민들은 입지적으로 절해고도의 폐쇄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언론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앞서 있었다. 한국 근대신문에 제주 기사가 등장하고, 신문지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취재 보도와 신문지사 운영은 당시 신문 편집자들이 개화 조류의 정황이나 뉴스원의 발굴 면에서 지방 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¹³⁾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漢城旬報(이하 순보)』¹⁴⁾와 『漢城周報(이하 주보)』¹⁵⁾에서 제주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었다. 보도 횟수로 보면, 『순보』에 1건, 『주보』에 3건으로 총 4건이다¹⁶⁾. 이들 기사는 제주목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狀啓(장계)에 올린 내용이 담겼다.

한국 최초 민간신문인 『獨立新聞(이하 독립신문)』¹⁷⁾에서도 제주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한글판 총 발행 호수 776호 가운데 129개 호에서 제주 관련 기사 83건¹⁸⁾이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896년 16건, 1897년 22건, 1898년 26건, 1899년 19건 등이다. 官報(관보)란에 실린 제주 기사는 54건(65%)으로 가장 많았다.¹⁹⁾

13) 이문교. 앞의 책, 30쪽, 53쪽

14) 『순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근대신문이다. 1883년 10월 31일 창간되어 음력 1일, 11일, 21일 열흘마다 발행되다가 이듬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정진석, 『한국신문역사』, 2013, 2쪽)

15) 『주보』는 1886년 1월 25일에 창간되어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다가 1888년 7월경 폐간되었다. 『순보』와 『주보』는 제호가 다르지만, 『주보』는 『순보』를 계승한 신문이다. (정진석, 앞의 책, 2쪽)

16) 이문교. 앞의 책. 53쪽

17) 『독립신문』은 개화운동의 선각자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에 창간한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 10월부터 1888년 7월까지 정부 기구인 박문국에서 『순보』와 『주보』를 발행한 일이 있었지만, 『독립신문』은 민간인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으로,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순보』, 『주보』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진석, 앞의 책, 14쪽)

18)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1995) 265쪽에는 독립신문에 게재된 제주 기사가 ‘1896년 4월 7일부터 1899년 12월 4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85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이거나 자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명확한 이문교의 『제주언론사』(1998) 32쪽을 인용한다.

19) 이문교. 앞의 책. 72-73쪽

특히, 『독립신문』에 실린 제주 기사를 통하여 『독립신문』이 제주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제주인이 탐관오리를 고발하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낸 일이나, 기사 보도를 요청하며 동전을 신문사에 보낸 일 등이 그 증거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언론의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도 분명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적인 한계로 지방 기사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²⁰⁾

『大韓每日申報(이하 대한매일신보)』²¹⁾는 제주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1907년 9월 18일 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전국 25개 지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신문에 제주를 등장시켰다.²²⁾ 1907년 11월 7일 자 4면 하단 광고면에도 제주성을 포함한 34개 지사의 지사장 명단이 실려있다. 당시 제주성 지사장은 ‘제주성내 일도리 객사동 고희래’로 기재되어 있다.²³⁾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맺어진 을사늑약(1905년) 이후 항일의 선봉에 나섰고, 한글판을 창간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전국에 지사망(網)을 두게 되었고, 1907년 11월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 32곳에 지사를 설치해 신문 보급과 배달, 수급, 지방통신까지 겸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1908년 5월에는 국문·국영문·영문판을 포함하여 모두 1만 3,400부가 팔렸다. 당시 친일지들의 발행부수가 1천부에서 최대 3천 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판매고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신문 경쟁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친일지들이 앞다퉈 제주지사를 설립하고 취재를 겸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친일지인 『京城日報(이하 경성일보)』에 제주지사를 두기도 하였다. 다만,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 조선총독부에 강제 매수되어 『

20) 이문교, 앞의 책, 95쪽

21) 『대한매일신보』는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7월 18일에 영국인 배설(裴設: Bethell, E. T.)이 창간하고 양기탁이 총무로 제작을 총괄하였던 한말의 대표적 항일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는 국한문판, 한글판,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의 3개 신문이 발행되었다. 1909년 5월 1일 배설이 사망한 후에는 신문을 경영하던 영국인 만함(萬咸: Alfred Weekley Marnham)과 일본 통감부가 비밀계약을 체결하여 1910년 5월 21일 소유권이 통감부로 넘어갔다. 3개월 후에는 강압에 의한 한일합병이 체결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며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신문』으로 제호가 바뀌면서 정치 정세의 변화에 따라 많은 굴절을 겪었다. (정진석, 앞의 책, 32-33쪽)

22) 이문교, 앞의 책, 33-34쪽

23) 고영철, 앞의 책, 41쪽

每日申報(이하 매일신보, 후에 每日新報)』로 이름을 바꿔 기관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태평양전쟁 수행의 전위(前衛) 역할을 맡아 제주도내 곳곳에서 무료로 다량 배포되었다.²⁴⁾

한국 최초 지역신문인 『慶南日報(이하 경남일보)』²⁵⁾에 구독료를 낸 제주 구독자가 있었다. 1910년 5월 22일 자에 宋斗玉(송두옥), 같은 해 10월 31일 자에 崔元淳(최원순)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본 경찰에 의해 제주로 유배되었던 朴泳孝(박영효) 주위에 있던 선비다. 신문 접근성이 좋았고, 일반 독자들이 신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주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일제강점기 3대 민간지인 『朝鮮日報(이하 조선일보)』, 『東亞日報(이하 동아일보)』, 『時代日報(이하 시대일보)』²⁷⁾에서도 제주지사가 확인되었다. 『동아일보』는 자체적으로 특파원 등을 통하여 제주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1925년 7월 30일 ‘전제주 소년소녀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1936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로 ‘한라산 탐험대’를 파견하여 취재하기도 하였다. 『시대일보』도 제주지국을 운영하였으나, 신문 발행기간이 짧아 보급이나 취재 활동이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조선일보』의 경우 제주지사장 張泰燮(장태섭)을 두고, 지국을 설치하며 취재와 신문판매를 겸하도록 하였다. 취재 활동으로는 1926년 5월 추자도 소요사건과 1931년 6월 제주 農檢(농검) 사건 豫審(예심) 결정 등이 보도되었다.²⁹⁾

일제강점기 때 제주지역언론 활동이 활발하였음은 「濟州記者團(이하 제주기자단)」 창립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기자단」은 1926년 『조선일보』 제주지국에서 기자 15명이 참석하여 최초 창립되었다. 이 기자단 창립을 통하여 제

24) 제주신보. 앞의 책, 265-267쪽

25) 『경남일보』는 1909년 10월 15일 창간된 근대 초기 유일한 지역신문이다. 국한문체로 창간된 총 4명의 신문으로 1915년 초까지 총 887호가 발행되었다. (김희주, 2022)

26) 이문교. 앞의 책, 35-37쪽

27)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20년 1월 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들 3개의 일간지를 ‘민간지’라 불렀는데, 이는 『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었다. 『조선일보』는 ‘신문명 진보의 주의’를 사시로 하여 1920년 3월 첫 호를 발간하였다. 『동아일보』는 중앙학교의 교장 김성수를 중심으로 발간이 추진되었다. 『시사신문』은 1924년 3월 31일 최남선이 창간한 신문이다. 전신은 시사주보 『동명(1922.09.03.-1923.06.03.)』이었다. 창간이 1년이 채 못 되어 1921년 2월에 폐간되었으나, 1924년 3월 31일에 『시대일보』가 새로 창간되어 후에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로 제호와 관권이 바뀌면서 발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1933년 2월 16일에 여운형이 사장에 취임하여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바꾸었다. (정진석, 앞의 책, 36-45쪽)

28) 이문교. 앞의 책, 41-42쪽

29) 제주신보. 앞의 책, 268쪽

주에는 최소 15개 이상의 신문·잡지 지국장이나 취재 기자들이 활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기자단의 활동은 일제의 언론탄압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1907년 7월 이완용 친일 내각이 제정한 「광무신문지법」을 언론탄압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21년 11월 27일, 우리나라 최초 기자단인 「無名會(이하 무명회)」가 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1924년 11월 4일 사회부 기자 모임인 「鐵筆俱樂部(이하 철필구락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자단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제주기자단 창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제주기자단」은 창립총회에서 ‘엄정한 필봉, 공명한 비판으로 대중의 여론을 대표하며 언론자유와 권위를 신장한다’는 요지의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각종 언론단체의 통합’을 「무명회」에 건의하기도 하였다.³¹⁾

위 내용은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의 이문교가 쓴 『제주언론사』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집약한 것이다. 『제주언론사(1998)』는 언론사 측에서 제작한 책 『제주신보 50년사(1995)』와 『제주일보 60년사-1945-2005(2005)』를 제외하고, 제주 언론의 출현부터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근대 역사를 집대성한 유일무이한 통사로써,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다만, 1998년에 출간되어 25년째 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제주 언론의 출현과 4.3 속 부침

앞서 설명했듯, 제주는 언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지식인간 교류도 활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지역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며, 광복과 같은 대전환의 시기와 맞물려 지역언론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주에 처음 신문 형태의 언론사가 등장한 것은 1945년 7월쯤으로,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이었다. 바로, 총독부의 기관지 성격의 『제주신보¹⁾』다. 『제주신보¹⁾』가 만들어졌을 당시, 제주를 미군으로부터 일본의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다.

30) 이문교. 앞의 책, 43-44쪽

31) 제주신보. 앞의 책, 270쪽

실제로, 제주에는 일본군 7만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조상윤, 2007). 당시, 미군기의 공습으로 육지부와 제주 사이 해상 교통이 두절되어 자체 신문을 발간하게 된 것이 『제주신보』였다. 『제주신보』의 주요 구성원도 일본인이었다. 일본군의 지령을 받고 파견된 『경성일보』 사회부장 미사마(三島)와 전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던 일본 본토 신문의 기자들이 『제주신보』를 발간하였다.³²⁾

『제주신보』의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자들은 『제주신보』의 제호로 발간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신보』의 호외판(1945년 9월 25일 자)을 종간호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외판과 종간호는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호외판에는 제호만 있고 발행인 등이 확인되는 板權欄(판권란)이 없어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영철(2019)은 『제주신보』의 공식자료가 남지 않은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특파원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임시 발간되었던 기관지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³³⁾

한국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권을 가진 최초의 우리말 제주지역 신문은 『제주민보』다.³⁴⁾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44일 만인 10월 1일에 창간하였다. 미군이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제주에 진주한 지 3일 만이었다. 창간 멤버는 김용수, 이기형³⁵⁾, 문종옥, 고팡태, 박광훈, 박대전³⁶⁾ 등이 있다.³⁷⁾ 이들은 『제주신보』에서 심부름하던 수습기자³⁸⁾들과 『경성일보』, 『매일신문』에 종사하던 기자들이었다.³⁹⁾ 10월 1일 제주시 칠성로 ‘강본 인쇄소’⁴⁰⁾를 임대하여 제1호 신문을 냈지만,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겨우 3호 발행을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그 뒤 『경성일보』 목포 특파원이었던 김진수⁴¹⁾를 영입하여 『제주신

32) 제주신보, 앞의 책, 265쪽, 275-276쪽.

33) 고영철, 앞의 책, 95-97쪽

34) 2023년 현재는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며 명맥을 잇고 있다.

35) 이기형은 창간호를 발행한 다음 날인 1945년 11월에 교원양성소에 입소하여 떠나고, 잡지 「신생」지 편집을 담당하던 이영복이 기자로 참여하였다. (이문교, 앞의 책, 136쪽)

36) 김용수의 목포공립상업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문교, 앞의 책, 136쪽)

37) 제주일보 『제주일보60년사-1945-2005』, 2005년, 235쪽

38) 고영철(2019)의 조사에 따르면, 수습기자의 인원 에 대한 기록은 2명(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1984)과 5명(이문교 『제주언론사』, 1998)으로 각기 다르다.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9) 제주신보, 앞의 책, 275쪽.

40) 김봉옥의 『제주통사』(2000)에서는 ‘사원(四元)인쇄소’로 표기되었으나, 이문교의 『제주언론사』와 제주신보 『제주신보50년사』, 제주일보 『제주일보60년사-1945-2005』에는 ‘강본(岡本)인쇄소’로 표기되어 ‘강본 인쇄소’로 통일하였다. 사원인쇄소는 1946년 제주신보가 인수한 인쇄소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 언론사와 관련된 이름의 오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41) 창간 멤버 김용수의 형.

보』로 제호를 바꾸고,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타개책을 시도하였다.⁴²⁾ 제호 변경은 경영일선에 나선 김진수가 1945년 10월 30일 공포된 미군법령 제19호에 따라 1946년 1월 26일에 이뤄졌다. 이후 김진수가 대표를 맡아 신문사를 경영하게 되었으며, 이때 합동통신과 수신계약을 체결하는 등 뉴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창간·등록 당시 『제주신보』 체제는 조합이나 동인지와 같은 성격이었다. 그러나 언론사 등록 후 미군 공보담당 라크우드 대위의 도움을 얻어 일본인이 경영하던 사원인쇄소를 인수하고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서 안정적인 경영으로 전환되었다.⁴³⁾

당시 도내 첫 ‘우리말 신문’은 기자들의 노력과 주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창간 당시 강본 인쇄소 대표는 기자들에게 무료로 신문 인쇄를 맡아주었고,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땅속에 묻어 두었던 한글 활자를 찾아내어 문선(文選)을 도왔다.⁴⁴⁾ 창간 멤버 기자들은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 섰던 오일장에 직접 신문을 뿌리며 신문 배부와 독자 확보에도 힘썼다. ⁴⁵⁾

『제주신보』는 제주도내 유일 신문인 만큼 1948년 4월 발발한 제주4·3과 관련한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언론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고, 심지어 언론인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제주신보』 제2대 편집국장인 金晸辰(이하 김호진)은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 내 뿌려진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당국에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말경 제주여고 근방 박성내 다리 또는 사라봉 근처에서 처형당하였다(고영철, 2020). 김호진은 1946년 『제주신보』와 『白鹿日報(이하 백록일보)』가 통합할 때 『백록일보』에서 『제주신보』로 넘어온 기자다. 김호진은 광복 이후 언론사상 첫 번째 희생당한 언론인으로 기록되고 있다.⁴⁶⁾

『백록일보』는 1945년 11월 중순 진보주의 청년 단체인 鄭基俊(이하 백록회, 회장 정기준)가 창간한 진보주의 성향의 신문이다. 『백록일보』가 어떠한 경향을 보였는지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백록회가 여운형 등의 정치 노선에 동조한 단체였

42) 김봉옥 .『제주통사』, 2000, 368쪽

43) 제주일보. 앞의 책. 236쪽

44) 이문교. 앞의 책. 127쪽

45) 제주일보. 앞의 책. 236쪽. 제주신보. 앞의 책. 276-277쪽

46) 고영철(2020)은 광복 이후 첫 번째로 희생당한 언론인은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의 사형 집행장에서 처형당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가 아니고, 김호진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는 점에서 좌익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백록일보』는 창간호 발간 이후 용지난으로 다음 호를 발간하지 못하였고, 『제주신보』 제작진들의 제안과 지역 인사들의 조정으로 두 신문이 통합한 후 종간되었다. 『백록일보』는 자유주의 노선의 신문인 『제주신보』와는 화학적 통합은 사실상 어려웠다. 『백록일보』 제작자들이 『제주신보』에 입사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쯤,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과 『제주신보』 출신 기자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다. 1946년 1월 중순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반론으로 좌우익의 대결이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을 때 『백록일보』 측 기자들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편집하여 조판하다가 김용수 기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여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백록일보』 측 기자들은 물러나고 김호진만 남아 제2대 편집국장이 되었다.⁴⁷⁾

당시,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과 『제주신보』 출신 기자들이 갈등은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제주신보』는 공식적으로 편집 이념이나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의 성향으로 편집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주신보』 창간 당시 언론인들은 일본어 신문에서 취재와 편집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념과 사상의 혼란한 국가 상황에서 중립적인 편집 정책을 시행하려던 『제주신보』 출신 기자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이념성을 보이던 『백록일보』 출신 기자들의 대결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이관열, 2003).

김호진은 1948년 10월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⁴⁸⁾ 명의의 대정부 선전포고문과 토벌대에게 보내는 호소문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인쇄해 준 혐의로 계엄당국에 체포되어 11월 말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인쇄해 준 선전포고문 등은 10월 24일 제주 읍내에 살포되었다고 한다(고영철, 2020).

1948년 12월에는 서북청년단⁴⁹⁾에게 『제주신보』의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긴 일

47) 이문교. 앞의 책. 138-139쪽

48) 이덕구는 조천읍 신촌리 출신이다. 1947년 여름 조천중학원에서 자취를 감춘 뒤 한동안 조천면 신촌리 사돈집에서 숨어 지내던 이덕구는 나로당 간부회의 도중 검거됐다 풀려난 뒤 한라산으로 입산해 4·3 발발 직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하여 조직된 인민유격대의 3·1지대장을 맡았다. 1948년 7·8월 사이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자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덕구가 모든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한겨레신문사,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Ⅱ』, 1992, 93-99쪽

49) 서북청년단은 서북학생총연맹, 환경직을 대표로 하는 월남한 서북 출신 개신교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승만에게 기대를 건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이 정권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지부부터 결정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북 활동, 좌익 소탕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 사건이다. 제주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악몽의 그림자’로 기억할 정도로 악명을 떨쳤다. 서북청년단은 제주도에 총 세 차

도 발생하였다. 기간은 1948년 12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총 16개월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주신보』는 왜곡 날조하는 보도로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6척 장신인 서북청년단 단장 김재능이 수염을 길러 위엄을 과시하려고 『제주신보』 회사를 자주 드나들면서 보도 내용에 대해 간섭하기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언론통제와 검열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편집국장을 지낸 김용수의 인터뷰를 보면 “연대 2대대의 주도 아래 경찰, 서청, 대청이 총동원된 봉개작전으로 무수히 많은 주민이 죽었지만, 신문에는 일체 쓰지 못하였다”며 “군에서 발표하는 대로 ‘정당한 군의 작전’으로 바뀌어야 하였고, 심지어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전하였다.⁵⁰⁾ 실제로 당시 『제주신보』 사장이었던 김석호는 서북청년단에 강력하게 항변하다가 그들로부터 수없이 구타당하였다. 김용수 편집국장도 서북청년단의 『제주신보』 접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집에서 강제 연행당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⁵¹⁾

『제주신보』 기자였던 김기오도 무리한 토벌전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경찰의 주목을 받아 급히 제주를 떠났다. 당시 그를 인터뷰한 글에 따르면, 김기오는 경찰의 토벌지구를 취재하던 중 소위 폭도라고 처형된 사람 중에 장님이 있어 이를 보도하였다가 최 천 감찰청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김기오 기사는 외도지서의 응원경찰이 주민을 데려갔는데 그 주민이 시체가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모습을 기사화하였다. 이후 경찰이 김기오를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김기오는 그날(1948년 7월경) 서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경향신문 제주지사장인 현인하, 서울신문 지사장인 이상희 등이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희생되었다.⁵²⁾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당국은 토벌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기자가 있다면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압박하였다. 결

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첫 번째는 1947년 3·1절 사건 직후에 유해진 지사의 부임과 함께 호위병 형식으로 입도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48년 4·3사건 발생 후였다. 세 번째는 1938년 10월 평안남도 출신인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이 제주도로 발령받은 뒤였다. 이때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경찰과 군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대대적인 학살극을 벌였다. (윤정란, 2018)

5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72-173쪽

51) 제주일보. 앞의 책. 244쪽

5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8-169쪽

국, 서북청년단은 『제주신보』을 강제 접수하였고, 그들이 강점하였던 기간동안 발행하였던 신문과 회사 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하였다.⁵³⁾ 기자들의 손과 발, 입과 귀를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이로써 제주4·3이 일어나는 초기 시기의 『제주신보』 취재 보도와 도내 언론인 활동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제주 지역 언론사의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된 계기다.

한편, 『제주신보』 경영권은 1949년 10월 12일 계엄령이 해제된 후 김석호 사장이 신문사 강제 접수의 불법 부당성을 법에 호소한 끝에 6·25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되찾았다.⁵⁴⁾

2. 제주4·3 연구 현황과 고찰

제주4·3은 현대사 연구에 있어 언급하지 않고서는 전체 흐름을 짚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4·3은 1947년 3월 1일 3·1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⁵⁵⁾으로, 광복 이후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대한민국 현대사다. 7년 7개월간의 시간 속에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의 도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⁵⁶⁾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10%⁵⁷⁾ 규모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12만 2,076명(희생자 1만 4,768명, 유족 10만 7,308명)이다.⁵⁸⁾

이후 4·3은 무고한 희생과 억울한 누명이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는 연좌제 등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의 사건’이 되었다가, 사건 발발 후 50여 년이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하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되어서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주4·3특별법」 공포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53) 이문교. 앞의 책. 158쪽

54) 이문교. 앞의 책. 158쪽

5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536쪽

5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7쪽

57) 김봉욱. 앞의 책. 355-356쪽

5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3년 10월 27일 제32차 심의를 열어 4·3 희생자 30명, 유족 13,165명을 추가 결정하였다. 제주도청 보도자료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page=42&act=view&seq=1436191>)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가 발간되며,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제주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4·3의 잔혹상을 공식화함으로써, 인권유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선구적인 사례로,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세력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정심, 2006).

최근에는 국가 첫 보상금이 4·3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였던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평화와 상생, 인권의 상징, 나아가 평화적으로 과거사를 해결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의 노력도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쌓인 각계각층의 헌신이 모여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다양한 학문 연구자들이 4·3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서 ‘정의로운 4·3 해결’이라는 목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4·3 관련 국내 학술연구와 학위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223건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제주 4·3’, ‘4·3 보도’, ‘4·3 언론’, ‘제주신보’, ‘제주신문’을 키워드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활용하여 DBPIA(누리미디어)와 스크라(학지사·교보문고), RISS(한국학술정보), eArticle(학술교육원),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ISS(한국학술정보) 등에서 학위논문과 KCI 등재 학술연구를 수집하였다. 이어, 수집된 정보 중 통역대학원 학위논문이거나, ‘제주 4·3’이 소재로서 적은 분량만 인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조사된 학술연구는 걸러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제목·서론·초록·주제어와 연구자의 전공, 학술 간행물의 성격 및 주제 분류 등을 분석하여 11개 분야별로 목록화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예술학(76건, 34.0%) △역사학(47건, 21.0%) △사회학·국문학·인문학·지역학 및 기타 학문(32건, 14.3%) △법학(16건, 7.1%) △역사교육학(11건, 4.9%) △여성학(11건, 4.9%) △종교학(10건, 4.4%) △언론학(5건, 2.2%) △심리치료·심리과학(5건, 2.2%) △관광학(5건, 2.2%) △건축지리학(5건, 2.2%)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단순 수치로 구분하면, 문

학·예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역사학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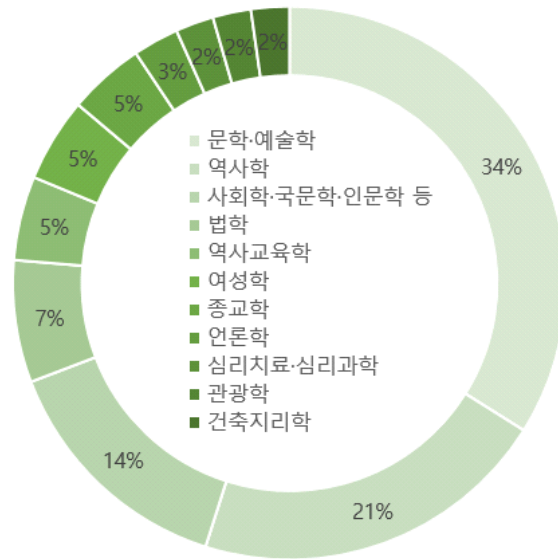
먼저 ‘제주4·3 학술연구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역사학 연구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는 항쟁사 연구, 사건 원인과 배경 연구 등 총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주로 이뤘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사건별로 세분화되어 연구 수준의 밀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4·3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 학술연구(석사)는 1985년 정민혜의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 :4·3사건과 관련하여」

다. 정민혜는 “전 제주도민의 가슴속에 깊은 슬픔과 증오심, 그리고 상호불신감을 심어 놓은 4·3폭동은 박헌영⁵⁹⁾과 남로당, 그리고 그 지휘 아래의 남로당 제주도지부의 공산주의자들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산폭동’ 인식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가 확정된 이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첫 논문인 양정심의 「濟州4·3抗爭 研究(제주4·3항쟁 연구)」에는 제주4·3을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귀결된 해방 전후의 한국현대사에서 5·10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당시 제주도민은 두 쪽이 아닌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원하였고, 이 점에서 좌익의 단선반대 투쟁에 동의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4·3은 한국현대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1> 제주4·3관련 국내 학술연구



59) 박헌영(1900-1955년 추정)은 조선공산당의 총비서였고 남조선노동당의 실력자였다. 1945년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될때까지 38도선 남쪽에서 이승만과 김 구, 김성수, 여운형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박헌영은 정권 획득에 실패하였다. 실패한 후 38도선 북쪽으로 도망쳐가서 북쪽의 김일성과 협력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김일성 수상 밑에서 부수상 겸 외상(외부무장관)을 하였다.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 신아문화사, 1989, 83쪽.

2000년대 들어서는 이념논쟁보다 ‘미군정의 역학과 책임’에 대한 연구(허호준, 2003; 함옥금, 2004; 고창훈, 2004; 양정심, 2006)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밖에도 ‘기억투쟁’과 ‘피해자’에 집중되는 경향(유철인, 2004; 허영선, 2004; 양정심, 2006; 박찬식, 2007)을 보였다. 2010년 이후에는 4·3의 경험과 구술, 기록을 분석한 연구(신은제, 2016; 조유정, 2019; 현수성, 2019; 서유림, 2019)와 주요 사건과 관계자 연구(김춘수, 2014; 이그나즈 아니타, 2016; 주정홍, 2019) 등을 통하여 4·3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단, 역사학 연구는 미군정의 책임과 진상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료 부족으로 구술에 의존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냈다. 또, 4·3의 정명 연구도 더더 4·3의 역사학 연구 분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역사 외 다른 분야의 학술연구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전후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4·3의 역사적 사건은 4·3 예술로 변주되어 다양한 소재로 연구되었다. 4·3예술 관련 학술연구는 ‘4·3 작가’로 대표되는 김석범⁶⁰⁾·현기영⁶¹⁾·김시중⁶²⁾ 등의 문학 연구가 대부분(이기세, 2001; 이주미, 2005; 김학동, 2007; 조수일, 2010; 이경아, 2011; 고명철, 2014)이며, 국외 문학과 한국 문학 및 작가 비교 연구(이연숙, 2007; 손지연, 2015; 김학동, 2018; 김동윤, 2020) 등도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드라마, 영상, 축제 등의 분야(허수정, 2013; 홍승혜, 2017)로도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학술연구자들은 4·3에 대한 관심은 예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양정심(1998)은 “학계가 문학에 일정 정도 빛을 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4·3 예술 연구는 4·3 학술연구에 활기를 더해주고, 역사적 사실을 복원시키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연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사회학, 국문학, 인문학, 법학, 역사교육학, 여성학, 종교학 등 다양한

60) 김석범은 1925년생 제주 출신의 제일교포 소설가다. 본명은 신양근(愼洋根)이며,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김석범은 필명이다. 대표적인 4·3작품으로는 『까마귀의 죽음(1957)』 『화산도(1965-1997)』 등이 있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w/김석범\(소설가\)](https://namu.wiki/w/김석범(소설가)))

61) 현기영은 1941년생 제주 출신으로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대표적인 4·3 작품으로는 『순이삼촌(1978)』 『지상에 순가락 하나(1999)』 등이 있다.

62) 김시중은 1929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자란 제일조선인 작가이자 4·3 문학가다. 1948년 4·3 항쟁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지평선(1955)』 『제일의 틈새에서(1986)』 『니이 가타(1970)』 『원야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잃어버린 계절(2010)』 『조선과 일본에 살다(2016)』 등이 있다. <예스24> (<https://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70161>)

분야에서 4·3을 연구 소재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역사학이나 문학·예술학이 제시한 4·3의 정의와 개념,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4·3 보도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표 2>를 보면, 4·3 연구 중에서 언론학 연구는 김광우(1994), 이관열(2003), 정용복(2020), 최낙진(2020), 고영철(2020)이 쓴 5건이 확인되었다. 비율도 보면,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언론학은 미디어의 역사를 제외하고, 국내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언론과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데 대체로 인색하였다(강철수·윤석년, 2010). 즉, 언론학 분야에서 제주4·3 연구는 매우 더딘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확장 가능성이 많은 연구 분야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표 2> 제주4·3 학술연구 현황-언론학 분야

연구자	연구명	발행연도	학술저널/학위	출처
1 김광우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1994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언론공보학(석사)	RISS
2 이관열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	2003	사회과학연구 42	DBPIA
3 정용복	언론은 제주4·3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 보수지와 진보지, 지역지의 비교 연구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 101(0)	DBPIA
4 최낙진	책,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에 관한 연구 : 신문 연재와 단행본 발행의 저널리즘	2020	한국출판학연구 46(3)	스콜라
5 고영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가? -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과 인민군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빼라인쇄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2020	제주도학회 54	KISS /스콜라

3. 제주4·3 보도 연구 현황 및 경향

제주4·3 보도 관련 최초 학술논문은 1994년 발표한 김광우의 「언론의 제주4·3 보도에 관한 연구」다. 김광우(1994)는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7개 언론사가 4·3을 시대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중앙지는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지방일간지는 『제주신문』과 『제민일보』, 『한라일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4·3이 발발한 1948년부터 1993년 사이 4-5월에 보도된 4·3 기사다. 건별로 보면, 『동아일보』 50건, 『서울신문』 20건, 『

조선일보』 29건, 『한겨레』 49건, 『제주신문』 139건, 『제민일보』 207건, 『한라일보』 81건으로 모두 575건이다.

김광우(1994)는 연구목적을 “언론이 사회적 정론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확대하려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언론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제주4·3을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4·3보도의 최대 이슈인 다량취굴 유골발견사례에서 나타난 언론사별 보도성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세 번째 “언론은 4·3규명의 문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앞의 세 가지 연구문제 분석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한국언론의 4·3논의 수준은 어떠한가”이다. 분석을 위하여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혼용하면서 언론의 4·3 논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광우(1994)는 ‘연구의 편의상’ 4개의 시기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정치 상황의 흐름에 따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김광우(1994)가 분석한 4·3 보도 시기 구분

	시기구분	기간
1기	4·3의 진행, 수습기	1948. 4. - 1960. 4. 19. 이전
2기	4·3의 논의기	1960. 4. 19. - 1961. 5. 16. 이전
3기	4·3논의의 암흑기	1961. 5. 16. - 1987. 6월항쟁 이전
4기	4·3 진상규명 논의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1기는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자체 취재가 거의 없고, 정부와 군경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건 현지에 있는 지방지가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엄격한 언론 통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기에서는 1기와 달리 지방지만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논의하는 보도를 보였다. 3기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군사정권 아래 4·3의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4기에서는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4·3의 논의가 언론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논의에서는 『한겨레』와 『제민일보』가 모든 형태의 기사를 동원해 많은 양의 기사를 쏟아낸 반면,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한라일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4·3에 대한 명칭의 사용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1기는 ‘폭동’과 ‘소요(사건)’, ‘파괴행동’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2기에는 ‘사건’, 4기에는 ‘사건’ 또는 ‘4·3’, ‘항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치 상황에 따라 4·3의 성격과 정의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기는 ‘경찰’, ‘검찰’, ‘군’, ‘미군’이 대부분이며, 2기는 ‘자체 취재’, ‘국회’ 등으로 변화하였다. 4기에서는 ‘자체 취재’, ‘사회단체’, ‘대학생’, ‘문화예술계’ 등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김광우(1994)는 1기 시기를 연구하면서 “중앙지는 사건 현장인 제주에 특파원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또 “지배세력의 통제로 현장취재가 거의 없어 정부와 군경의 입장만을 대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짚어보겠다.

김광우의 연구논문은 4·3을 언론학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논문으로서 의미가 깊다. 또한,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 4·3의 보도 인식 변화를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도 높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4·3 당시 보도 연구 범위가 매우 개괄적이고, 학자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4·3 언론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다음 연구는 10년 만에 등장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이관열(2003)은 4·3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을 조사하고, 한국 언론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당시 미군정의 선전과 언론사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지만 대체로 4·3 언론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내왔다. 당시 미군정의 선전과 언론사의 역할과 한계는 분명하였다. 1945년부터 한반도의 통치권이 미국으로 이관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인 미국에 귀속되었다고 하였다. 언론정책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10월 30일 미군정 법령 제19호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이 공포되었고, 언론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전국에는 수많은 신문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언론정책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언론인 테러와 체포, 언론사 습격 등 대혼란이 야기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제의 언론 정책과 유사한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말했다.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이관열(2003)은 당시 제주지역 언론 기자들은 해방 이후 조국의 자유와 독립, 통일을 원하였지만, 미군정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 언론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제주지역 언론은 미군정이 유포한 4·3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을 그대로 전하는 미군정의 메시지 중개자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미군정 아래 정론을 펼치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언론이 4·3 봉기 탄압에 적극 협조한 국면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예시로, 제주지역에 북한 인공기를 단 잠수함이 출현하였다는 기사(1948년 10월 13일 자, 『동아일보』)를 실례로 들었다. 이관열(2003)의 연구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4·3 당시 언론 보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면밀한 자료 분석에 근거한 연구이기보다는 연구자 주관에 따른 해석 위주의 연구로서 한계가 있었다.

이후 4·3 보도 연구가 멈춰있다가 2020년에 3편의 연구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정용복(2020)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4·3진상보고서 확정,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사건에 대한 국내 보수신문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와 진보신문으로 꼽히는 『한겨레』, 그리고 지역신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보도 유형과 태도를 프레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언론이 제주4·3을 어떻게 보도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제주4·3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4·3 보도에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들이 누구이며, 이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프레임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용복(2020)에 따르면, 분석기간 내 총보도량 977건 중 지역지 『제민일보』가 486건을 보도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였으며, 『제주일보』 219건, 『한라일보』 19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지에서는 『한겨레』가 55건, 『조선일보』가 25건을 보도하였다. 제주4·3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지역에서의 주목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보도유형이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주4·3보도가 심층적이라기보다는 표피적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중립적인 보도에 치중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정용복(2020)은 프레임 유형과 특성 연구,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진보와 보수, 전국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제주4·3의 인식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즉, 4·3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전국지의 무관심 속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 구성의 차이점을 보인 반면에 지역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제주4·3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정용복의 연구는 흔히 많은 4·3 보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최근 4·3의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변화에 맞춘 언론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지역성, 이념성에 따라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4·3에 대한 전국지와 지역신문이 가진 기존 4·3 인식과 비슷한 결과로서 한계점이 있다.

최낙진(2020)은 제민일보가 1990년 6월 2일 자 창간호부터 1998년 2월 11일 자 411호까지 연재한 장기탐사 기획 <4·3은 말한다>를 묶은 단행본 『4·3은 말한다』를 분석하고, 신문의 연재기사가 단행본 책으로 출간되는 의미를 저널리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주신문의 <4·3의 증언>⁶³⁾과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는 탐사보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획물이다. 오랜기간 금기어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4·3의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낙진(2020)은 제주언론이 4·3의제를 만들고, 공론화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4·3의제 관련 반대입장 혹은 저항 세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도덕적 우위성을 갖지 않고서는 장기간 4·3의제 탐사보도를 끌고 오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4·3은 말한다>를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꼽았다.

또한, 최낙진(2003)은 책 『4·3은 말한다』를 신문 저널리즘이 출판 저널리즘으로 ‘재발화’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익을 모색하는 판매전략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재를 이어갔던 특별취재반 기자들의 소명 의식과 열정, 동료기자 와 경영진, 데스크의 신뢰와 지원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발행일을 중심으로 한 ‘당대 저널리즘’에 가깝다면, ‘출판 저널리즘’은 신문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지속시켜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역사 저널리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최낙진의 연구는 엄밀하게 4·3 보도를 분석한 것은 아니

63) 책 『4·3은 말한다』는 『제민일보』의 장기기획시리즈 <4·3은 말한다> 기사를 책으로 편찬한 것이고, 『제민일보』의 기획물은 『제주신문』의 <4·3 증언>의 취재기자들이 퇴사 후 명맥을 이은 것이다. 『제주신문』은 제주 4·3 40주년을 맞아 1988년 3월 5일 기자 16명을 중심으로 ‘4·3 특별취재반’을 구성해 기획취재를 시작하였다. (최낙진, 2020)

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의 4·3 취재 노력과 그 결과를 학술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영철(2020)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희생당한 한 언론인의 생애’를 추적하였다. 『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내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인민군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선전포고문과 호소문 또는 포고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처형당하였다는 일화에 대한 기록들의 사실 여부를 연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덕구 명의의 선전포고문과 호소문, 포고문 △재산공비의 불온빠라(선전빠라) △무장대 최고 지휘자의 포고문과 담화문 △유격대의 선전(불온)빠라 등 16개 문헌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과 ‘포고문’ 2가지 중 ‘포고문’은 모조품이라는 사실, 즉, 김호진 편집국장이 인쇄해준 유인물(빠라)은 일명 ‘호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처형을 당한 시기는 10월 말이 아닌 11월 25일 이후로 정정하였으며, 김호진 편집국장 등이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빠라)을 신문사의 시설을 이용해 인쇄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 등을 밝혀냈다. 종합하면 “김호진 국장 등은 1948년 10월 24일 제주읍내에 뿌려진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호소문을 인쇄해 준 혐의로 군경당국에 체포되어 동년 11월 말경 제주여고 근방에 위치한 박성내 다리 또는 사라봉 근처에서 처형당하였다”고 사실을 바로 잡았다. 고영철(2020)의 연구는 제주지역 언론역사 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온전한 4·3 보도 연구를 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처럼 4·3 보도 연구는 공통적으로 4·3 보도 실체의 접근에 한계를 보였다. 대부분 4·3 이후 현재 시점의 언론 인식 연구에 머물러 있었으며, 4·3 당시 보도를 연구하였다고보다는 언론역사와 인물, 출판 저널리즘과 같은 우회적인 연구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결국, 4·3 당시 언론 보도를 분석한 학술연구는 1994년에 발표된 1건뿐이며, 이마저도 양적 분석에 머물러 있어 4·3 당시 보도와 취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이미 30년 가까이 지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언론 신문기사가 당대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언론사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면서도, 당시 언론은 수많은 인명이 학살된

4·3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힐난하고 있다.

이관열(2003)은 4·3보도에 대하여 “한국 언론사의 불행한 출발을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방 후 한국언론이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의 언론 철학을 수립하지 못하고, 미군정 선전의 중계자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동족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한국 언론사의 큰 오점’을 남겼으며, ‘한국 언론의 정체성을 알려 주는 리트머스’로서 반면교사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양정심(2006)은 당시 언론이 통제됨으로써 제주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만 맞게끔 보도되었고, 육지에서는 제주의 초토화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하였다. 이 전에는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원인과 토벌 작전에서의 민간인 희생과 이에 대한 토벌대의 책임 등을 지적하는 기사와 르포가 실렸지만 1948년 말부터는 이에 대한 기사가 적어지고, 유격대의 공격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나, 혹은 귀순한 유격대원의 후회와 재생의 각오를 다지는 기사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조유정(2019)은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草稿)’라고 설명하면서도, 제주 4·3 당시 언론은 4·3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고 하였다. 이어 당시 언론은 민주주의 기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정치적인 선전 도구와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하였다고 하였다. 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강경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는 것도 언론이라고도 지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주 4·3보도’가 한국언론의 불행한 출발이라며, 당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 자료는 사실상 ‘왜곡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3이 발발한 당시 보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보도 내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장취재를 통하여 4·3 당시 기자들이 4·3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당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취재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보겠다. 이는 단 한 번도 접근해보지 못하였던 연구인 만큼, 초기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4·3 보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언론학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해석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4. 프레임 연구

프레임 개념은 언론 분야에서 내용분석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내용은 현실 그대로의 것이 아니며, 특정 측면을 부각 또는 축소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게 중개된 현실(mediated reality)을 제공받게 한다는 것이다(유세경·이 석·정지인, 2012). 즉, 미디어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이슈와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속성이 전제되어 있다(이서현·고영철, 2013).

프레임 개념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의제를 제공한 고프먼(Goffman, 1974)은 프레임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의 각 조직에 의미를 부여할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틀(‘framework)’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더해 아이엔거(Iyengar)는 뉴스 프레임을 실증하고 효과를 입증하였다. 텔레비전 정치 뉴스에 대한 보도방식을 주제적(thematic) 프레임과 일화적(episodic)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⁶⁴⁾ 이처럼 ‘틀’의 방식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 오면서, 언론이 어떤 측면을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이서현·고영철, 2016).

언론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기틀린(Gitlin, 1980)이 시발점이 되었다. 기틀린은 1980년 저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에서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신좌익 학생운동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고프먼의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엔트만(Entman, 1993)도 프레임을 지각된 현실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 강조하여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언론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뉴스의 틀의 평가에는 문제의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해결방안 제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고 하였다(이민웅, 2003; 고영철, 2013). 즉, 언론이 사회 현실을 일정한 ‘틀’로 재구성하여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결국 뉴스의 텍스트적 속성의 집합이지만, 그중에서도 뉴스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특성의 집합이다. 단순히 사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안의

64) 송정민·한 선(2005), 재인용, 126쪽

종합적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이진웅·김성희, 2018).

이와 같은 프레임의 특징을 활용하여 특정 언론 이슈나 사건에 대한 ‘틀’을 짓는 선행연구는 수없이 많다(송정민·한 선, 2005; 강철수·윤석년, 2010; 유세경·이석·정지인, 2012; 고영철, 2013; 이서현, 2017; 이준웅, 2018; 정용복, 2020; 진명지·안가영, 2023). 예컨대, 송정민·한 선(2005)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일보』와 『광주일보』의 5·18 관련 사진물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는데, 『광주일보』는 5·18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모태로 제시하려는 ‘전국화 담론’을 반영하였고, 『조선일보』는 침묵과 최소한의 인정이라는 국가담론을 반영하면서 5·18을 국소화·지역화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형성하였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고영철(2013)은 프레임을 활용하여 제주도정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선정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이 N7W재단이 처음 짜 놓은 ‘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준웅·김성희(2018)는 중앙일간지의 미세먼지 보도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유목을 정해놓고 뉴스프레임을 확인한 결과를 자료기반적 방법으로 구조적 주제모형(STM)을 적용하여 뉴스프레임을 추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주제 모형을 적용한 뉴스프레임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보도에 나타나는 주제적 프레임의 분포가 언론사에 따라 그리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진명지, 안가영(2023)은 코로나19 백신 이슈에 대한 신문 사설의 프레임을 연구한 결과, 보수지에서는 백신 수급 문제를, 진보지에서는 한국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남을 밝혀냈다. 즉,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도 언론의 이념에 따라 선별되고 강조되는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광복 직후 육지언론의 제주 현장취재 보도 내용을 토대로, 언론사별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주제적 프레임을 형성하여 작동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현장취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선을 담고 있는 기사로서, 프레임이라는 정형화된 주제로 환원하여 당시 육지언론사가 제주의 사건들을 내용을 어떻게 부각하고, 어떤 의제로 삼았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현장취재 보도 프레임 연구는 거의 없어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3 전후 시기, 제주를 현장취재 보도한 육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3 전후 시기, 육지언론사의 제주 현장취재 보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가.
- 2-1. 주요 정보원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2-2. 뉴스 프레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1946년부터 1950년까지 4·3 전후 시기, 육지언론사의 현장취재는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3-1. 육지언론사는 당시 제주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였나.
 - 3-2. 육지언론사는 당시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나.
 - 3-3. 육지언론사는 당시 당국과 좌익세력의 상황과 입장을 각각 어떻게 묘사하였나.

2. 분석자료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제주4·3평화재단의 아카이브 누리집과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누리집,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사건자료집-신문편』(총 3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육지언론사 기자가 제주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69건을 확인하였다. 언론사는 『경향신문』⁶⁵⁾, 『국도신문』⁶⁶⁾, 『국제신문』⁶⁷⁾, 『동광신문』⁶⁸⁾, 『독립신보』⁶⁹⁾, 『

65) 『경향신문』은 1946년 10월 6일 가톨릭교계의 신문으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이 40년 전에 발행되었던 『경향신문』의 속간인지 아닌지 『경향신문』 스스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정관사 위조지폐 사건 이후 미군정 산하로 넘어간 정관사 사옥과 인쇄 시설을 불하받아 창간하였는데, 여기엔 미군정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강준만, 『한국언론사』, 2019, 187-188쪽)

『동아일보』70), 『서울신문』71), 『자유신문』72), 『조선일보』73), 『조선중앙일보』74), 『한성일보』75), 『현대일보』76) 등 12곳이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육지언론의 제주 4·3 현장취재 보도 목록

	날짜	제목/내용	언론사
1	1946.12.18	신화의 세계 제주도 상(上) / 일제 침략기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서울신문
2	1946.12.18	군사시설 태무(殆無) / 제주도의 지브롤터화는 무근 / 본사 김 특파원 발전(發電)	독립신보
3	1946.12.18	동백꽃 핀 마을을 찾아 / 일제 유린과 연합군 포연 후에 백일흔과 전단의 향기도 높다 / 제주도 기행기	독립신보
4	1946.12.18	제주답사기(상) 불요불굴 일하는 도민, 이번 대전 이후로 중요성은 가중	자유신문
5	1946.12.19	제주답사기(중) 밀수에도 딱한 서정, 도 승격에 도민은 신경과민의 기우	자유신문

- 66) 『국도신문』은 1948년 4월 1일 창간된 일간시사지로, 발행 겸 편집인은 이봉혁이다. 1949년 3월 9일 『국제신문』을 인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서 발행되었다. (윤임술, 『한국신문백년지』, 1983, 577쪽)
- 67) 『국제신문』은 1948년 7월 21일 정무목이 『민보』의 판권과 지령을 계승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창간하였다. 1948년 8월 16일부터 편집인 겸 발행인 이봉구, 주필 송지영, 편집국장 정국은으로 개편하였다. 정계의 뒷소식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재치 있는 시사평론으로 독자가 흥미를 가지도록 기사의 취재와 편집방향을 설정하여, 상업신문으로서의 성격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성일보』, 『경향신문』 등과 함께 5대일간지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579쪽)
- 68) 『동광신문』은 1945년 10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민보』로 창간되어 1946년 7월 제호가 바뀌었다. 타블로이드 판 2면체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인 겸 주간은 선미봉이 맡았다. 이 신문은 당시 한민당이 기관지로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민보』라는 제호와 내용이 좌경이라 하여 문체되었다. 이로 인해 1946년 7월 선미봉이 미군정 수사기관에 구금되고 신문은 휴간되었다. 풀려난 뒤 선미봉은 제호를 『동광신문』으로 바꾸고 속간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8일에 기관지화하려는 한민당에 의하여 좌익지라는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정간당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489쪽)
- 69) 『독립신보』는 1946년 5월 1일 서울 을지로 1가에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의 논조는 시종일관 좌익계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극좌지의 성격을 띠었다. 1946년에는 신탁통치안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1947년 3월 18일 자 제281호 1면 사설에서는 ‘제주도 폭동’을 ‘제주도의 쫓겨’로 표시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625쪽)
- 70) 『동아일보』는 1920년 1월 6일 중앙학교 교장 김성수를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정진석, 앞의 책, 40쪽)
- 71)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설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의 계보를 잇는 신문으로, 광복 후 창간되었다. 1949년 5월 3일 정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서울신문』을 정간시켰으며 6월 20일 속간하면서 간부를 친이승만계로 바뀌었다. 『서울신문』의 주식의 48.8%가 귀속 재산이었으므로, 사실상 기관지로 전략하게 되었다. (정진석, 앞의 책, 33쪽; 강준만, 앞의 책 208쪽)
- 72) 『자유신문』은 1945년 10월 5일 창간한 타블로이드 형 2면의 일간신문이다. 당시, 『조선인민보』와 『중앙신문』과 함께 수도 서울의 유력한 일간지였다 (윤임술, 앞의 책, 479쪽)
- 73) 『조선일보』는 1920년 1월 6일 자로 『동아일보』, 『시사신문』와 함께 민간지로 창간되었다. (정진석, 앞의 책, 36쪽)
- 74) 1933년 2월 16일 여운형이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한 후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바꾸고, 경영을 이어갔다. (정진석, 앞의 책, 44쪽)
- 75) 『한성일보』는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주독립을 사시로 1946년 2월 26일 사장 안재홍을 두고 창간하였다. (윤임술, 앞의 책, 529-531쪽)
- 76) 『현대일보』는 1946년 3월 25일 박치우를 발행 겸 편집인으로 창간되었다. (윤임술, 앞의 책, 619쪽)

6	1946.12.19	모리배는 여기서도 도량(跳梁) / 경찰은 반동세력을 조장하고 노동자는 공장문 열라고 외친다 / 제주도가행기	독립신보
7	1946.12.19	신화의 세계 제주도(하) / 천여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승고한 근로정신 하(下)	서울신문
8	1946.12.20	제주도답사기(하) 요지인 까닭에 도는 풍설, 일제시대는 중요기지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자유신문
9	1947.04.02	파업후의 제주도답사 현지보고 (상) / 도민은 우의와 향토애로 / 순경과의 새에 얽힌 미묘한 대조	경향신문
10	1947.04.03	파업후의 제주도답사 현지보고 (하) / 경관과 민중의 조화 필요 / 쌍방의 과민한 대처가 불행 소치	경향신문
11	1947.04.03	침울한 제주도 - 총파업 1주 후의 정세	자유신문
12	1947.04.05	피흘린 제주도 기록/검붉은 피는 아직도 땅에 원망스러이 고여있다!!	독립신보
13	1948.04.27	제주도 봉기의 진상 (1) / 전통적인 평화향에 단정 반대의 무장봉기	독립신보
14	1948.05.07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피의 제장(祭場)'으로 변모한 남해의 고도 '제주'	동아일보
15	1948.05.08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중죄범 관대 처분 좌익세력 날로 증대	동아일보
16	1948.05.09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농민 참살의 비극	동아일보
17	1948.06.03	불원 진정 기대	현대일보
18	1948.06.04	제주의 밤은 죽엄의 거리 - 산란부락에는 끊임없이 총성이 은은 - 1읍 13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조선중앙일보
19	1948.06.04	제주현지보고 / 폭동습격이 집중, 살기 황일, 일익 혐악+화	한성일보
20	1948.06.05	제주도현지보고 / 전소 부락도 다수, 도로·교량은 모두 파괴	한성일보
21	1948.06.05	폐허화하는 제주 전선은 ! - 산발 도로 교량은 파괴 - 불안과 공포로 부락주민은 전무 상태	조선중앙일보
22	1948.06.05	제주도현지 보고 / 산간부락은 소요측 세력 / 도로 교량은 모두 파괴	서울신문
23	1948.06.06	제주도사건 현지보고(3) / 두고도 못먹는 기아의 위협 / 농번기 들판엔 인영이 절무	조선일보
24	1948.06.06	제주도 현지보고 /보리는 익어가는데 농부의 그림자도 안보이는 들판 / 상공에는 미군기 해안에는 미군함	조선중앙일보
25	1948.06.08	제주현지보고 /사건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 /최고지휘관 뿌 대좌 기자단에 답변	조선중앙일보
26	1948.06.09	제주현지보고 /귀순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의 양심적 행동을 호소 / 그들의 요구는 통일정부수립	조선중앙일보
27	1948.06.09	제주도사건 현지보고(4) /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 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	조선일보
28	1948.06.10	제주현지보고 - 불안에 싸인 그들 - 묵묵하고 활기없다	조선중앙일보
29	1948.06.10	재선 불능 상태 / 제주선관위 재연기 요청	조선중앙일보
30	1948.06.10	제주도 현지보고 / 혈서로 귀순 거부 / 경비대가 말하는 인해군	서울신문
31	1948.06.11	제주도 현지보고 / '산사람'된 촌민 / 경비대나 경찰이 오면 '양민'화	서울신문

32	1948.06.11	제주소요 현지보고 /조선의 축소판 /원인제거가 급선무	조선중앙일보
33	1948.06.12	제주도 현지보고 / 무장경찰 8백여 / 날이 갈수록 살기 창일(漲溢)	조선중앙일보
34	1948.06.13	제주도 현지보고 / 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	조선중앙일보
35	1948.06.22	소란의 제주 시찰기/목포 일선 기자단	동광신문
36	1948.07.11	경찰 불법숙청이 급무/무력만으론 해결 불능/김(金)청장, 최(崔)대장 방침 천명	조선중앙일보
37	1948.07.11	제주도 현지보고 /제주는 울음의 바다! /죽도 살도 못하는 그들의 심경 /부락민은 복구공사에 동원	조선중앙일보
38	1948.07.11	그 후의 제주도 현지보고 / 총성은 멈췄으나 공포 속에 잠긴 도민들	서울신문
39	1948.07.11	우색에 잠긴 도민 / 부락민 복구공사에 동원	한성일보
40	1948.07.13	그 후의 제주도 / 청년 없는 마을들, 도민의 회의감은 여전	서울신문
41	1948.07.20	동란의 제주도사건 전모/이도 부패가 원인/사설단체의 가림주구도 성행	서울신문
42	1948.07.20	제주사건 / 경찰의 무장해제 등 소요측서 조건을 제출?	조선일보
43	1948.07.21	민의 수습/오리(汚吏) 단속/제주지사 소신 담	국제신문
44	1948.07.21	요즘 제주사태 - 아직도 불안한 정세	조선중앙일보
45	1948.07.21	경찰의 무장해제 등 제주소요 측서 제안	조선중앙일보
46	1948.07.21	인민군의 사령은 학벌 출신 이승진	한성일보
47	1948.07.21	여전히 항전 계속, 사령부에는 400여 명의 폭도 수용 / 제주소요 속보	한성일보
48	1948.07.23	제주도 그 후 사태 - 유기시체 처처서 발견	조선중앙일보
49	1948.07.29	동란의 제주도 현지답사① - "무력만으론 해결불능" - 최 국경사령관, 기자단에 역설	조선중앙일보
50	1948.07.30	동란의 제주도 현지답사② - "산사람 요구는 경찰의 무장해제" - 김봉호 경찰청장과 일문일답	조선중앙일보
51	1948.09.26	비장한 유언 문 손 양명 /종용히 취사/박 대령 암살범 문상길 중위, 손선호 상사 총살형 목격기	서울신문
52	1949.04.10	폭도진압은 목첩(目捷)/제주서 신(申)국방장관 회견담	국도신문
53	1949.04.10	평화의 낙원 재건/국방·사회 양(兩) 장관 제주도 시찰	자유신문
54	1949.04.14	재건에 매진하자/신(申)장관 제주부녀대회서 역설	국도신문
55	1949.04.15	총성 잔잔한 제주/어부의 뱃노래 들린다	자유신문
56	1949.04.19	불안정한 도민 생활/물심양면의 구제가 긴급	자유신문
57	1949.04.21	동백꽃은 다시 피어나 /포위·고립화 작전 주효(奏効)/제1연대의 공훈은 혁혁!	국도신문

58	1949.04.22	동백꽃은 다시 피려나 /귀순폭도 날로 증가!/성명없는 입후보 광고도 이경(異景)	국도신문
59	1949.04.23	동백꽃은 다시 피려나 /유명한 관음사도 소실/도민의 재건열 날로 고조	국도신문
60	1949.06.25	제주도포로가 말하는 최근 심경/기자대담	경향신문
61	1949.06.25	“양민 살상은 거북한 일” / 감정적 동기였고 이젠 꿈에서 깬것같다/4·3사건 막후 배문!	경향신문
62	1949.06.28	제주도의 요즘 모습 / 인구 감소 3만여 / 주택은 2만여 호 소실	조선중앙일보
63	1949.06.28	제주도 현지보고(1) / 폐허속에 우마(牛馬)가 방황 / 아동들 애국가는 평화의 상징	경향신문
64	1949.06.29	제주도 현지보고(2) / 선무로 8,000여 명이 귀순 / 군작전 목표를 3단계로 구별	경향신문
65	1949.06.30	제주도 현지보고(3) / 뒤틀수습을 든든히 하라 / 재건에 기백(氣魄)이 있는 인물이 필요	경향신문
66	1949.09.01	변모한 제주 3다/10만 재민의 구호 긴급	서울신문
67	1949.09.01	동란에서 재건으로 그 후의 제주도 모습	조선중앙일보
68	1950.02.16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의 모습 / 허물어진 옛터에 내 삶의 새로운 건설보(建設譜)	한성일보
69	1950.02.17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의 모습 / 부모 잃은 고독한 어린이 세대 / 시급한 구호대책 긴급	한성일보

수집기간은 광복 직후부터 4·3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포사건(1947.03.01.)과 남로당의 무장봉기(1948.04.03.), 그리고 계엄령 해제(1949.10.12.) 전후까지 한정하였다. 3·1절 발포사건 이전의 기사를 수집한 이유는 3·1사건 이전의 제주 민생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데다, 3·1절 발포사건과 남로당 무장봉기가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에서도 일본군의 항복과 철수, 귀환 인구의 급증, 미군정의 선포, 도제 실시,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등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4·3의 발발 배경을 논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4·3이 발발한 1948년 4월에 앞서 광복 직후의 현장취재 보도를 연구하면서, 당시 육지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겠다.

3.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는 시기별 특징을 찾기 위하여 육지언론이 제주 현장취재를 감행하였던 시기를 나누었다. 그 기준은 미군정 자료와 당시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변화에 따랐다. 시기별 정치적 성향과 수집된 분석자료의 시기를 비교하면서 ‘1946년대’, ‘1947년대’, ‘1948년대 이후’까지 3가지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 현장취재를 감행한 육지 언론사들의 시기별 정치적 성향과 변화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4·3 관련 보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정보원과 기사 내용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하였다. 시걸(Sigal, 1973)은 뉴스에 대하여 “무엇이 발생하였는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라고 한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보원이 제공한 말이나 자료를 이용한 것이 뉴스라는 것이다. 그만큼 정보원은 기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조 박, 2021). 그리고, 동일한 이슈나 사건에서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사 태도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이서현·고영철,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사에 언급된 정보원을 ‘주(主) 정보원 유형’과 ‘부(副) 정보원 유형’으로 나뉘어 살펴보고, 기사의 방향과 의도를 추적해보겠다. 그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5>정보원 유형

	유형	내용
1	당국 관계자	미군정,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관계자
2	좌익세력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 사건 관계자
3	일반 도민	일반 제주도민과 희생자
4	기타	변호사 등 가해 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5	없음	정보원이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4·3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4·3은 20세기 중반인 1948년 냉전의 기점에서 정점을 찍은 세계적인 학살 사건으로서, 이

데올로기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은 무시되었고, 이데올로기를 중심에 놓은 마녀사냥은 무고한 제주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겼다.⁷⁷⁾ 다만, 연구를 위하여 대립 구도에 있는 사건 당사자들을 나눠 구분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은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선택한 최근에는 조사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4·3 진상조사 초기에는 ‘가해자별 현황’을 통하여 대립 구도에 있는 무리의 피해 건수와 비율은 집계했다. 그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4·3 당시 가해자별 현황 조사

	목록	내용				
			도벌대	무장대	기타	분류 불능
1	1960년 국회 양민학살신고서	합계	10,277명	1,353명	209명 ¹⁾	40명
		비율	84.0%	11.1%	1.7%	3.3%
2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2000-2001년)	합계	10,955명 ²⁾	1,764명 ³⁾	43명 ⁴⁾	1,266명
		비율	78.1%	12.6%	0.3%	9.0%

- 1)아사, 병사, 자살 등 포함
- 2)경찰 군인 서청 자경대 응원대 민보단 등이 포함됨
- 3)무장대 유격대 자위대 인민군 폭도 공비 괴한 등이 포함
- 4)자살 주민 정체불명 등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표 6>을 인용하여 정보원의 분석 유형을 ‘당국 관계자’, ‘좌익 세력’, ‘일반 도민’, ‘기타’, ‘없음’으로 나눴다. ‘당국 관계자’는 광복 후 국내에 주둔하였던 미군과 검찰, 경찰 등과 같은 정부 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였다. 일명, 좌익세력인 남로당을 잡는 토벌대와 우익세력들을 ‘당국 관계자’에 담았다. ‘좌익세력’으로는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조직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반 도민’은 ‘좌익세력’이나 ‘당국 관계자’가 아닌 일반 제주도민이며, ‘기타’는 육지에서 온 변호사 등 그 밖의 인물이다. 정보원을 밝히지 않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기사일 때는 ‘없음’으로 선별하였다.

정보원 분석은 4·3 당시 현장취재 기사에서 정보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가장 먼저 언급한 정보원을 ‘주(主) 정보원’, 그 다음에 언급된 정보원은 ‘부(副) 정보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기사작성 방식은 5W1H에 따른

77) 박성우(2021.06.25.) “냉전시대, 세계적인 학살 역사…“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냐(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교 원장)”, 제주소리(<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873>)

역피라미드 방식이다. 역피라미드 방식은 중요한 사건을 가장 첫 번째 단락에 표상되도록 하고, 중요성이 그다음인 정보를 나열한다(Tuchman, 1972).⁷⁸⁾ 이에 따라 언급된 순에 따라 중요도를 매겨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현장기사의 유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8가지 프레임 유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4.3 당시 현장취재보도 관련 뉴스 프레임 유형

	유형	내용
1	자연·인문환경 소개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 역사적, 생활 환경적, 문화적으로 처한 제주 현지 사정 단순 전달
2	사건 개요 전달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 사건의 발발 원인과 상황, 분석 내용을 단순 전달
3	좌익세력 비판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의 폭력 행위 비판
4	당국 비판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군경의 과도한 진압 비판
5	좌익세력 대변	사건에 대한 남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등 좌익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
6	당국 대변	사건에 대한 당국 관계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
7	도민 연민	여러 사건에 의한 침탈과 폭력에 따른 도민 연민을 담은 내용
8	당국 찬양	당국의 토벌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내용

본 연구의 프레임 분류는 전체 기사를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귀납적 방법은 이미 검증된 프레임 방식을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된 상태로 사용하는 연역적 접근방식과는 반대의 연구방법이다. 즉, 귀납적 방법은 프레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뉴스 보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프레임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다(유세경·이 석·정지인, 2012; 정용복, 2020). 본 연구에서는 각 현장취재 기사의 프레임을 찾기 위하여 모든 기사를 읽고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와 리드문, 본문에서의 맥락 등을 분석하여 프레임을 개념화하였다. 그 결과, ‘자연·인문환경 소개’와 ‘사건 개요 전달’, ‘좌익세력 비판’, ‘당국 비판’, ‘좌익세력 대변’, ‘당국 대변’, ‘도민 연민’, ‘당국 찬양’ 등 8가지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자연·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은 제주 현지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아 역사적, 생

78) 김소희(2014). 재인용, 9쪽

활 환경적, 문화적으로 처한 제주의 현지 사정을 감성적인 어휘를 사용해 독자에게 단순 전하는 것이다. 예로, 제주를 “신화의 세계”, “평화향”, “동백꽃 핀 마을” 등으로 묘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은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고, 원인을 분석한 기사로 나왔다. “쌍방의 과민한 대처가 불행 소지”, “1읍 13면의 경찰지서 대부분이 피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좌익세력 비판’과 ‘당국 비판’ 프레임은 상호 배타적인 프레임이다. ‘좌익세력 비판’은 남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와 같은 좌익세력의 행위를 문제 삼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당국 비판’ 프레임은 이와 반대로 광복 이후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과도한 폭력과 진압 행태를 꼬집는 내용이다. “폭동습격이接踵, 살기惶일, 일의협약화”는 ‘좌익세력 비판’ 프레임이며, “경찰은 반동세력을 조장하고”와 같은 어휘 사용은 ‘당국 비판’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좌익세력 대변’과 ‘당국 대변’의 프레임 역시 상호 배타적인 유목이다. 예컨대 “그들이 요구는 통일정부수립”은 좌익세력의 입장을 전하는 프레임, “사건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은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프레임으로 나누었다. ‘도민 연민’ 프레임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에 의해 무고한 희생에 대한 연민의 심경을 담은 기사를 분류한 것이다. “불안과 공포로 부락주민은 전무 상태”, “두고도 못 먹는 기아의 위협”, “부모 잃은 고독한 어린이 세상”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국 찬양’ 프레임은 당국의 토벌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유목이다. “포위·고립화 작전 주효, 제2연대의 공훈은 혁혁!” 등이다.

특히, 육지언론은 기사를 통하여 제주 현지 사정과 사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복합적이며, 취재 대상에 따라서도 인식이 미세하게 변화함에 따라, 주 프레임과 부 프레임으로 유목을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프레임은 기사의 제목에 대한 분석이며, 부 프레임은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리버스(rivers, 1964)는 ‘기사 제목’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을 압축해 스토리를 전해주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뉴스의 중요도를 등급화하고, 신문을 매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기사 제목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형화하는 정신적 구조물의 역할을 한다. 또, 신문제작 과정에서 ‘기사 제목’은 신문사의 논조를 조율하는 기회로 간주되고, 특정사안에 대한 제목의 논조와 쟁점 제시 방식은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신문의 정치적 관점과 태도를 읽을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다(고영철,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기사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잡았다. 부 프레임의 유목은 주 프레임과 같으며, 리드문과 본문에서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제목이 ‘주제’라면, 리드문 또는 본문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목이 전체 사건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면, 본문은 사건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신문기사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목적 아래 묶일 수 있는 여러 텍스트가 모인 ‘텍스트코스모스’이고, 신문기사의 궁극적 기능이 ‘제보’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8). 이에 기사의 주제인 ‘제목’과 맥락인 ‘기사의 리드문 또는 본문 내용’을 주 프레임과 부 프레임으로 동시 살펴봄으로써, 기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분석 유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박사 과정 대학원생 1명이 참여하여, 69건의 기사 중 11건(15.9%)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보원과 기사 본문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홀스티(Holsti)의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정보원의 ‘주 유형’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부 유형’은 0.9였다. 또, 기사 내용에 대한 프레임 중 주 프레임은 0.8, 부 프레임은 0.8로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

1. 육지언론사 정치적 성향 및 보도 비교

1)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육지언론사 12곳에서 보도된 69건의 기사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7건과 『국도신문』 5건, 『국제신문』 1건, 『독립신보』 5건, 『동광신문』 1건, 『동아일보』 3건, 『서울신문』 10건, 『자유신문』 7건, 『조선일보』 3건, 『조선중앙일보』 19건, 『한성일보』 7건, 『현대일보』 1건 등이다. 69건의 현장기사 내용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연구하기 전, 1945년부터 4·3 계엄령 해제 전까지의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민·관 기관에서 이들 육지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실제 보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시기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이듬해인 1946년부터, 제주 4·3의 현장을 보도한 기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1950년까지다. 이 시기 언론은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만큼이나 혼돈, 그 자체였다.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한 이틀 후인 11일 한국인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공표하였으며, 한 달 후인 10월 30일에는 미군정 법령 제19호 5조(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통하여 발표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9월 22일에는 아놀드 군정장관이 일제의 악법이었던 「출판법」을 포함한 12개의 법률을 폐기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구한국 정부가 제정하였던 「광무신문지법」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미군정 말기부터 건국 후 자유당 정권에 이르는 시기 언론 통제와 탄압의 모법(母法)의 구실을 하였다.⁷⁹⁾

미군정의 통치 기간인 3년은 한반도뿐 아니라, 한국언론의 발전 방향과 틀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좌익, 우익주도의 언론계가 등장하였고, 언론 사이에서도 이데올로기 대립이 나타났다.

79) 백선기, 『한국언론보도의 기호학』 1997, 333-334쪽

해방 직후 정국을 주도한 것은 좌익세력이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을 결성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반면, 우익세력들은 일제 치하에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왔기에 해방 직후의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건준은 1945년 8월 16일 총독부의 우리말 기관지 『매일신보』를 접수하여 『解放日報(이하 해방일보)』를 창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잔존해 있던 일본군에 의하여 17일 다시 탈취되었다. 건준은 방송국도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일본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좌익계열은 9월 8일 건준과 인민공화국 지지를 선언한 『조선인민보』가 창간된 것을 필두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해방일보』와 『중앙신문』 등이 창간하면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익 계열도 미군의 진주와 함께 동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6일에는 한민당이 결성되었고, 9월 22일 『민중일보』가 창간된 후 『동신일보』, 『자유신』, 『신조선』 등이 창간되었다. 하지만, 좌익계열의 신문을 능가하진 못하였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던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3일 복간되었으며, 이어 『동아일보』도 12월 1일에 복간되었다⁸⁰⁾

<표 8>은 미군정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1946년 10월 30일의 전국 정기간행물 발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⁸¹⁾ 서울의 집중도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표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결과적으로 여러 언론사가 생겨나면서 이념 투쟁도 과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 8>미군정기 정기간행물 현황(1946. 10. 30. 현재)

		일간	주간	월간, 기타 정기간행물	전체
서울	종수	39	62	101	202
	발행부수	757,420	489,050	478,700	1,725,170
부산	종수	8	5	5	18
	발행부수	32,225	2,175	30,450	64,850
대구	종수	6	4	5	15
	발행부수	71,100	2,525	13,100	86,725
경상	종수	2	3	5	10

80) 채 백 『한국 언론사』, 2015, 257쪽.

81) 채 백, 앞의 책, 259쪽; 김영희(2009)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 1880-1980』, 커뮤니케이션 북스, 158쪽

	발행부수	10,520	900	3,500	149,200
전라	종수	8	1	5	14
	발행부수	91,100	불명	2,180	93,280
충청	종수	2	1	1	4
	발행부수	40,000	300	불명	4,300
경기	종수	2	2	5	9
	발행부수	12,000	6,000	9,000	27,000
기타	종수	1(춘천)	1(제주)		
	발행부수	1,225	220		
전체	종수	68	79	127	274
	발행부수	1,015,590	501,170	536,930	2,053,690

서울에서 발행한 1947년판 『조선연감』에서는 신문 소재지별 언론사를 살펴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부터 발행해 온 기존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에도 새로운 신문이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⁸²⁾ 그 내용은 <표 9>에 있다.

<표 9> 1946년 현재 남한의 일간신문(통신 포함)의 현황 (*허가번호 순)

도별	신문명(소재지)
경기도	한성일보(서울), 공업신문(서울), 산업경제통신(서울), 민주일보(서울), 조선일보(서울), 실업경제일보(서울), 동아일보(서울), 서울타임스(서울), 가정신문(서울), 공립통신(서울), 산업경제신문(서울), 중외신보(서울), 경향신문(서울), 서울신문(서울), 경제통신(서울), 독립신보(서울), 자유신문(서울), 합동통신(서울), 수산경제신문(서울), 대한독립신문(서울), 조선통신(서울), 중앙경제통신(서울), 국제일보(서울), 대동신문(서울), 조선상공통신(서울), 경민신문(서울), 해방통신(서울), 부녀신문(서울), 민중일보(서울), 중앙통신(서울), 현대일보(서울), 조선인민보(서울), 중앙신문(서울), 제삼특보(서울), 중앙경제신문(서울), 인천신문(인천), 대중일보(인천)
강원도	강원일보(춘천)
충청북도	국민일보(청주)
충청남도	동방신문(대전)
전라북도	전북신문(군산), 전라민보(전주), 군산민보(군산), 남선신문(군산)
전라남도	조선중보(광주), 호남통신(광주), 전남신문(순천), 호남신문(광주), 대중신문(여수), 목포신문(목포)
경상북도	경북신문(대구), 영남일보(대구), 민성일보(대구), 대구타임스(대구), 남선경제신문(대구), 여성일보(대구), 상주일보(상주)
경상남도	대중신문(부산), 인민해방신문(부산), 부산정보(부산), 부산매일신문(부산), 민주중보(부산), 조선일신문(부산), 자유민보(부산), 부산신문(부산), 신한일보(부산), 고려통신(부산), 경남일보(진주), 부산일보(부산)
황해도	웅진일보(웅진)

82) 신상준, 앞의 책, 222-223쪽; 조선통신사 편(1946) 『1947년판 조선연감』, 1946. 238-286쪽. 인용

신문의 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전의 언론이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던 때가 많았던 것처럼, 해방 이후의 언론 역시 정치 권력과의 마찰 또는 대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련과 굴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언론에 간섭 없는 언론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미국과는 다른 전통과 정치구조, 사회상황의 미숙, 좌우 대립이라는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고, 제한도 없는 언론자유 허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상은 퇴색되고, 당국의 언론통제와 신문 발행의 억제, 언론인 구속 등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⁸³⁾

정치적, 이념적 성향별 언론사를 분류하는 자료도 일부 남아있다. 미군정의 1946년 5월 29일 자 「정보참모부주간요약서」에는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1)극좌익으로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를, (2)좌익으로 『서울신문』과 『자유신문』, 『중앙신문』, 『독립신보』, 『현대일보』를, (3)중도신문으로 『중외신보』와 『서울타임스(영문)』를, (4)극우익으로 『대동신문』과 『동아일보』 및 『가정신문』을, (5)우익으로 『산성일보』와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를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표 10>⁸⁴⁾과 같다.

<표 10>1946년 5월 29일 발행한 미군정의 언론사 이념적 성향 분류 자료

성향	언론사	성향	언론사
극좌익	해방일보	중도	중외신보
	조선인민보		서울타임스(영문)
좌익	서울신문	극우익	대동신문
	자유신문		동아일보
	중앙신문		가정신문
	독립신보	우익	산성일보
	현대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	

1947년 하반기 기준의 언론의 경향 분석한 자료도 있다.⁸⁵⁾ 1947년 9월 미군정

83) 정진석, 『인물 한국 언론사』, 1995, 349-350쪽.

84) 신상준 『제주도4·3사건 II』, 2000, 192-195쪽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7, 29 May 1946, Incl # 3(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8, 15 January 1946, Incl # 2, 및 No. 31, 17 April 1946, Incl # 4 참조).

85) 최 준, 『신보관-한국신문사』, 1990, 347-348쪽.

‘조사월보(1947년 9월 제24호)’와 김용중 주재 조선사정협회지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1947년 11월호)를 참고로 재작성한 표<표 11>이다.

<표 11>1947년 하반기 기준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

	신문명	발행부수		정치적 성향	
		미군정	조선 사정	미군정	조선 사정
1	경향신문	61,300	62,000	중립	중간노선
2	서울신문	52,000	52,000	중립	중립
3	동아일보	43,000	43,000	우익	극우
4	자유신문	40,000	40,000	중립	중립
5	조선일보	35,000	25,000	중립	우익
6	독립신보	25,000	40,000	좌익	극좌
7	노력인민	-	32,000	-	극좌
8	현대일보	25,000	25,000	중립	극우
9	광명일보	-	25,000	-	좌익
10	한성일보	23,000	24,000	우익	우익
11	대동신문	13,000	23,000	우익	우익
12	민주일보	-	20,000	-	우익
13	중외일보	-	20,000	-	좌익
14	민중일보	12,000	12,000	우익	극우
15	중앙신문	10,000	10,000	중립	중립
16	독립신문	6,000	6,000	우익	극우
17	세기일보	6,000	6,000	중립	중간노선
18	우리신문	-	5,000	-	중간노선
19	민중	-	4,000	-	좌익
20	조선중앙일보	2,000	2,500	좌익	중간노선
21	문화일보	-	2,500	-	좌익
22	수산경제신문	1,000	-	중립	-
23	공업신문	4,000	-	중립	-
24	가족신문	2,000	-	우익	-
25	서울타임스	12,000	-	중립	-

또한, 1948년 당시 남한의 대표적 신문 11개의 발행 부수를 확인하면 <표 12>와 같다.⁸⁶⁾ <표 12>는 미군정이 1946년 5월 29일 공포한 군정 법령 제88호 ‘신

86) 신상준, 앞의 책, 195쪽

문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의 이후 통계로서, 광복 초기 좌익계열 신문이 우세하였던 것과 비교해 전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건 우익 또는 우익 신문의 발행 부수가 좌익계열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46년 우익지로 분류되던 『세계일보』가 1948년 좌익지로 변화하였고, 1946년 중도였던 『서울타임스』가 1948년 좌익으로 성향이 새롭게 분류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1948년 8월 현재 남한의 대표적 신문(11개)의 발행부수와 정치적 성향

	신문명	정치적 성향	발행부수	최초발행일	비고
1	동아일보	온건우익	6만 부	1945. 12. 1.	
2	경향신문	우익	7만 1,000부	1946. 10. 6.	
3	한성신문	온건우익	2만 6,500부	1946. 2. 26.	
4	조선일보	온건우익	5만 8,000부	1946. 2. 26.	
5	서울신문	온건우익	7만 6,000부	1945. 10. 20.	
6	자유신문	온건우익	5만 부	1945. 11. 20.	
7	평화일보	극우익	1만 5,000부	1945. 10. 5.	
8	세계일보	좌익	1만 6,000부		
9	조선중앙일보	좌익	1만 5,000부	1947. 2. 14.	
10	서울타임스	좌익	3천 부	1945. 9. 5.	영문자신문
11	독립신보	공산주의	2천 부	1946. 5. 1.	현재 주간, 곧 일간전환예정

※출처 :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4, July- August 1948, Part VI, Section 3, Table 1.

위의 <표 8>부터 <표 12>까지 결과를 근거하여 분석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언론사 12곳 중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9곳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13>⁸⁷⁾에 있다.

87) 1974년대 언론사별 논조 및 정치적 성향은 '미군정'이 아닌 김용중(1898-1975)이 제작에 참여한 조선사정협회지 『한국의 소리』를 따랐다. '미군정'이 분석한 정치적 성향과 『한국의 소리』가 분석한 정치적 성향은 각기 달랐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제작한 『한국의 소리』가 더 신뢰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김용중은 일제강점기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한인국민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사,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Ⅲ』, 1992, 213-220쪽

<표 13> 언론사별 논조 및 정치적 성향 변화

언론사	정치적 성향 변화			언론사	정치적 성향 변화		
	1946년	1947년	1948년-		1946년	1947년	1948년-
경향신문	-	중립	우익	서울신문	좌익	중립	온건우익
국도신문	-	-	극우	자유신문	좌익	중립	온건우익
국제신문	-	-	좌익	조선일보	우익	중립	온건우익
독립신보	좌익	좌익	공산주의	조선중앙일보	-	좌익	좌익
동광신문	우익	우익	우익	한성일보	-	우익	온건우익
동아일보	극우익	우익	온건우익	현대일보	좌익	중립	-

<표 8>부터 <표 12>까지 자료에서는 『국도신문』과 『국제신문』, 『동광신문』 3곳에 대한 분류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창간 당시 편집방침과 발행인의 활동에서 그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신문』은 1948년 7월 21일 정무목이 『민보』의 판권과 지령을 계승해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정계의 뒷 소식을 취재하여 보도했으며, 상업신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 공산계열을 비호하거나 찬동하는 편파적 경향을 나타내었고, 1949년 3월 4일 ‘경북 폭동사건에 경북지사 가담’이라는 기사를 원인으로 기자들이 구속되고, 1949년 3월 5일 발행 취소 처분을 당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17일 이봉혁이 『국제신문』을 인수하고 『국도신문』을 발행하였다. 서울에서 발행되었다가, 경영난으로 자유당 간부당원이었던 김장성이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편집방침이 극우의 성향을 띠게 된다. 반공 투쟁을 목표로 하는 자유당 기관지가 된 것이다.⁸⁸⁾

『동광신문』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광주에서 『광주민보』로 창간되었다가 1946년 7월 제호를 바꾸었다. 당시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기관지로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민보’라는 이름이 좌경시 되어 발행인인 선미봉이 미군정 수사기관에 구금되고 신문이 휴간되는 일이 있었다. 결국, 『동광신문』을 기관지화하려는 한민당의 공작 끝에 한민당 간부 고평부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⁸⁹⁾ 즉, 『동광신문』은 우익지로 볼 수 있다.

88) 윤임술, 앞의 책, 579쪽

89) 윤임술, 앞의 책, 489쪽

2)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시기별 보도 차이

<표 13>을 보면, 1년 사이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영향이 없는 1949년 창간한 『국도신문』과 일관된 정치적 성향을 유지해온 『조선중앙일보』, 『국제신문』, 『동광신문』을 제외하고 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사의 시기별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해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미세한 변화를 보인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립신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등 5곳이었다. 『동아일보』는 광복 직후 ‘극우익’이었다가, 제주 3·1절 발포 사건 때 ‘우익’으로, 4·3 발발 이후 ‘온건우익’으로 옮겼다. 『조선일보』는 같은 시기 ‘우익’에서 ‘중립’으로, 또 ‘온건우익’으로 변화하였다. 『독립신보』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좌익’으로 분류되었다가, 1948년부터 ‘공산주의’로 바뀌었다. 『한성일보』는 1947년에 ‘우익’이었다가 1948년 ‘온건 우익’으로 분류되었다. 『현대일보』도 1946년에 ‘좌익’에서 1948년 ‘중립’으로 변화하였다.

정치적 성향이 크게 변화한 언론사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자유신문』 3곳이다. 『서울신문』과 『자유신문』은 ‘좌익’에서 ‘중립’이 되었다가 ‘온건우익’으로 전향되었다. 『경향신문』은 1947년 ‘중립’ 성향에서 4·3이 발발한 이후 ‘우익’ 성향으로 전향되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보인 시기별로 육지언론사 현장보도 기사를 언론사별, 건수별, 정치적 성향별 현황을 나눠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시기별 육지언론사 현황

시기	언론사(건수, 정치적 성향)	종합
1기 (1946년)	『서울신문(2건, 좌익)』, 『독립신보(3건, 좌익)』, 『자유신문(3건, 좌익)』	좌익 성향의 3개 언론사에서 8건 현장기사 보도
2기 (1947년)	『경향신문(2건, 중립)』, 『자유신문(1건, 중립)』, 『독립신보(1건, 좌익)』	중립 성향 2개, 좌익성향 1개 언론사에서 4건의 현장기사 보도
3기 (1948년-)	『경향신문(5건, 우익)』, 『자유신문(4건, 온건우익)』, 『독립신보(1건, 공산주의)』, 『동아일보(3건, 온건우익)』, 『조선중앙일보(19건, 좌익)』, 『한성일보(7건, 온건우익)』	극우 성향 1개, 온건우익 성향 5개, 우익 성향 1개, 좌익 성향 1개, 공산주의

	의)』, 『조선일보(3건, 온건우익)』, 『서울신문(8건, 온건우익)』, 『국도신문(5건, 극우)』, 『동광신문(1건, 우익)』, 『현대일보(1건, 미확인)』, 『국제신문(1건, 좌익)』	성향 1개 등 9개 언론사에서 57건의 현장기사 보도
--	----------------------------------------------------------------------------------------------------------	-------------------------------

3) 시기별 보도 분석

<표 14>를 보면, 1기에서는 좌익 성향의 언론사에서 제주 현장취재가 확인되었다. 총 8건의 기사로서, 1개 언론사당 2-3회의 연속보도를 진행하였다. 광복 직후, 좌익계열의 언론이 대세였고, 미군정이 1945년 10월 30일 미군정 법령 제19호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었던 시기였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의 민심은 흥흥하였다. 1945년 8월 광복은 이뤘지만, 도내 경기는 도민들의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1945년 11월 10일 미군정이 제주에 입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도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소문도 돌았다. “제주도를 동양의 지브롤터라고 하고 미국이 요새화한다는 설⁹⁰⁾이다. 이 설은 시사평론가 화이트씨가 1946년 10월 21일 자 뉴욕 AP보도를 통하여 “조선 제주도는 자차 북부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타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국내 언론사가 보도⁹¹⁾하면서 국내에 퍼졌다.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남단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영국의 속령이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품은 지브롤터는 영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함이 상시배치되었던 지역⁹²⁾이다. 즉, 제주를 지브롤터처럼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 언론을 통하여 전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은 1945년 8·15 종전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격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제주도는 뜻하지 않게 일본군에게는 본토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로, 전쟁 상대인 미국군에게는 일본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는 섬’으로 부각된 것이다.⁹³⁾

이 시기 현장취재 기사를 보면, 이 ‘제주를 동양의 지브롤타화 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주 현지를 오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

90) 『자유신문』, 1946.12.18

91) 『자유신문』, 1946.10.22.

92) 나무위키 참조. (namu.wiki/w/%EC%A7%80%EB%B8%8C%EB%A1%A4%ED%84%B0)

9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8쪽

다. 그리고, 이 취재는 당국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⁹⁴⁾. 여기서 ‘당국’은 미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군정은 해방 후 한반도 이남을 점령하고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1947년대인 2기에서는 중립 성향의 2개, 좌익 성향의 1개 언론사에서 4건의 현장기사 보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의 기사 2건과 『자유신문』 공립 특파원 발 1건, 『독립신보』의 고(高) 본사 특파원 발 1건이 확인되었다. 『경향신문』은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보고’라는 문패로 2건의 기획기사는 이틀 동안 연이어 보도하였다. 『자유신문』은 ‘침울한 제주도- 총파업 1주 후의 정세’라는 제목으로 현장취재 기사를 실었다. 『독립신보』는 ‘피흘린 제주도 기록/검붉은 피는 아직도 땅에 원망스러이 고여있다!!’라는 제목의 현장취재를 지면에 선보였다.

당시 제주에는 경찰이 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무고한 시민들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식날 도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3·1 발포사건이다. 경찰이 시위군중을 향해 총을 쏜 사건으로, 3·1 발포사건은 제주4·3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 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온 도민이 분노하였다. 희생자 중에는 젓먹이를 안은 젊은 엄마도 있었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 전개되었다.⁹⁵⁾ 하지만 이 시기 현장취재 보도가 단 4건만 확인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체감도와 육지언론의 관심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3기는 제주 4·3이 발발한 직후인 1948년 4월 이후의 현장기사들이다. 1950년 2월까지 9개 언론사에서 57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만큼, 4·3의 발발과 그로부터 이어진 학살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 반대와 그에 따른 봉기 등에 대한 육지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좌익, 우익과 같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11개 언론사에서 57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시기별로 가장 많은 현장 보도 횟수를 보였다.

94) 『자유신문』. 1946.12.18.

9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3쪽

2. 현장취재 보도의 내용분석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원 유형과 뉴스 프레임에 차이가 있을까.

먼저, 정보원 유형에 따라 시기와 언론사를 구분하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분석의 목적은 양적인 횟수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의 유형을 모두 더하였다.

<표 15> 시기별 정보원 유형 분석 (건)

	1기 (1946년)	2기 (1947년)	3기(1948년-)	전체
당국 관계자	6		41	47
좌익세력	2		6	8
일반 도민	4	6	17	27
기타			3	3
없음	4	2	47	53
전체	16	8	114	138

<표 15>를 보면, 정보원을 밝히지 않은 ‘없음(53건)’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당국 관계자(47건)’ 비중이 다음으로 많았고, ‘도민(27건)’과 ‘좌익세력(8건)’, ‘기타(3건)’이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기에서는 ‘당국 관계자(6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2기는 ‘일반도민(6건)’, 3기는 ‘당국 관계자(41건)’가 시기별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당국의 감시로 인터뷰가 힘들었던 좌익세력에 대한 인터뷰도 매우 적지만, 1기 2건, 3기 6건이 확인되었다. 단, 2기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

언론사별 정보원의 차이도 살폈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주 정보원’과 ‘부 정보원’이 분석되었으며, 첫 번째 연구결과로 기사 내용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주 정보원’을 먼저 살펴보겠다.

<표 16>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분석 (건(%))

		경향신문	국도신문	국제신문	동광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종합
당국 관계자	주 정보원	3 (42.9)	4 (80.0)	1 (100.0)	1 (100.0)	1 (20.0)	1 (33.3)	3 (30.0)	5 (71.4)	1 (33.3)	9 (47.4)	3 (42.9)	1 (100.0)	33 (47.8)

	부 정보원	0 (0.0)	3 (60.0)	0 (0.0)	0 (0.0)	0 (0.0)	1 (33.3)	2 (20.0)	3 (42.9)	0 (0.0)	4 (21.1)	0 (0.0)	1 (100.0)	14 (20.3)
좌익세력	주 정보원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부 정보원	2 (28.6)	1 (20.0)	0 (0.0)	0 (0.0)	1 (20.0)	0 (0.0)	0 (0.0)	2 (28.6)	0 (0.0)	0 (0.0)	0 (0.0)	0 (0.0)	6 (8.7)
일반도민	주 정보원	1 (14.3)	1 (20.0)	0 (0.0)	0 (0.0)	2 (40.0)	0 (0.0)	4 (40.0)	2 (28.6)	0 (0.0)	4 (21.1)	2 (28.6)	0 (0.0)	16 (23.2)
	부 정보원	1 (14.3)	1 (20.0)	0 (0.0)	1 (100.0)	2 (40.0)	0 (0.0)	2 (20.0)	1 (14.3)	0 (0.0)	3 (15.8)	0 (0.0)	0 (0.0)	11 (15.9)
기타	주 정보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5.3)	0 (0.0)	0 (0.0)	2 (2.9)
	부 정보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1 (1.4)
없음	주 정보원	1 (14.3)	0 (0.0)	0 (0.0)	0 (0.0)	2 (40.0)	2 (66.7)	2 (20.0)	0 (0.0)	2 (66.7)	5 (26.3)	2 (28.6)	0 (0.0)	16 (23.2)
	부 정보원	4 (57.1)	0 (0.0)	1 (100.0)	0 (0.0)	2 (40.0)	2 (66.7)	6 (60.0)	1 (14.3)	3 (100.0)	11 (57.9)	7 (100.0)	0 (0.0)	37 (53.6)
주 정보원 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9 (100.0)
부 정보원 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9 (100.0)

주 정보원 : $\chi^2=40.214$, $df=44$, $p<0.635$
부 정보원 : $\chi^2=47.704$, $df=44$, $p<0.325$

<표 16>에서 보듯, ‘주 정보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당국 관계자’의 인용이 33건 (47.8%)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육지언론 기자들이 제주 현장취재를 위한 경제적, 환경적 지원을 제공한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기자들은 당국 관계자들이 생산한 자료에 가까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덕분에 좌익계열보다 당국 관계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8년 5월 9일 『동아일보』에는 “하오 2시 반. 10여 명의 폭도가 오라리를 습격 중이라는 정보를 접한 제주검찰청 박근용 부청장은 (중략) 기자의 동행도 허락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948년 6월 5일 자 『한성일보』와 『조선중앙일보』, 『서울신문』에는 “현지 시찰기자단 일행은 (중략) 국방경비대 장교의 안내로 교전지구를 거쳐 피해 당한 부락을 시찰하였다”고 밝혔다. 1949년 4월 19일 『자유신문』은 “함 연대장의 안내로 선무공작대 위문단과 한라산 주둔 부대로 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949년 9월 1일 『서울신문』은 “기자는

28~29 양일에 걸쳐 장 내무차관 일행과 함께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혹독한 동란을 겪은 제주도를 일주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군정의 엄중한 언론 통제 상황도 한몫하였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도민(16건, 23.2%)’을 인용하거나, 정보원을 표기하지 않은 ‘없음(16건, 2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언론사에서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극우 신문이었던 『국도신문(4건, 80.0%)』는 물론,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독립신문(1건, 20.0%)』까지 예외는 없었다. 앞서 말하였듯, 기자들은 좌익세력이나 일반도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재가 쉬운 군·경 등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좌익세력’을 ‘주 정보원’으로 인용한 사례는 『경향신문(2건, 28.6건)』뿐이었다. 1949년 6월 25일 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부조직부장인 김양근 외 7명의 포로를, 같은 해 6월 30일 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이었다가 포로로 붙잡힌 김민성을 인터뷰한 글을 각각 기재하였다. 다만, 이 역시 정부 당국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실제로, 1949년 6월 25일 자 또 다른 기사에서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으로 19일 아침 8시 제2연대 부연대 소장실에서 (중략) 포로와 10분간 좌담회를 열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 정보원’에서는 정보원 ‘없음(37건, 53.6%)’이 절반을 넘었다. ‘당국 관계자(14건, 20.3%)’와 ‘일반도민(11건, 15.9%)’이 그 뒤를 이었다. ‘주 정보원’에서는 ‘당국 관계자’를 정보원으로 인용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되었지만, ‘부 정보원’에서는 ‘없음’이 가장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정보원을 밝히지 않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도 기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들이나, 공포에 질린 모습들이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1948년 6월 10일 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소」 기자가 묻는 말에 「그리말수다(글썸을시다)」 하고 다시 말이 없다”라고 쓰여있다. 1949년 4월 21일자 『국도신문』의 기사에서 “이곳 도민에게 제주의 과거를 묻고 싶어 거리도 나섰다. “모르구다-” 그는 기이한 눈초리로 네가 무엇이냐는 듯 흘겨본다. (중략) 무슨 불행이 있을 수 알 수 없어 경계하는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도민은 닷선 이와 상황에 많

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국 관계자’를 ‘부 정보원’으로 인용한 언론사는 극우지인 『국도신문(3건, 60.0%)』과 우익계열 『동아일보(1건, 33.3%)』와 『서울신문(2건, 20.0%)』, 좌익계열 『조선중앙일보(4건, 21.1%)』와 『현대일보(1건, 100.0%)』, 좌익계열에서 우익계열로 변화한 『자유신문(3건, 42.9%)』까지 모두 6곳이었다. 또, ‘좌익세력’을 ‘부 정보원’으로 인용한 언론사는 극우지인 『국도신문(1건, 20.0%)』과 공산주의 계열인 『독립신보(1건, 20.0%)』, 그리고 중립 노선에서 우익을 변화한 『경향신문(2건, 28.6%)』과 『자유신문(2건, 28.6%)』에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보원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좌익과 우익 성향과 관계없이 대립적인 ‘당국 관계자’와 ‘좌익세력’을 모두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임 분석에서 기사 간, 언론사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표 17>로 정리하였다.

<표 17>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건(%))

		경향신문	국도신문	국제신문	동광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총합
제주사정전달	주 프레임	1 (14.3)	1 (20.0)	0 (0.0)	0 (0.0)	3 (60.0)	0 (0.0)	2 (20.0)	4 (57.1)	0 (0.0)	2 (10.5)	0 (0.0)	1 (100.0)	14 (20.3)
	부 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2 (2.9)
사건개요전달	주 프레임	1 (14.3)	0 (0.0)	0 (0.0)	1 (100.0)	0 (0.0)	0 (0.0)	3 (30.0)	0 (0.0)	1 (33.3)	0 (0.0)	3 (42.9)	0 (0.0)	15 (21.7)
	부 프레임	2 (28.6)	0 (0.0)	0 (0.0)	0 (0.0)	3 (60.0)	0 (0.0)	2 (20.0)	3 (42.9)	0 (0.0)	6 (31.6)	3 (42.9)	0 (0.0)	19 (27.5)
좌익세력비판	주 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4 (5.8)
	부 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3 (4.3)
당국비판	주 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2 (2.9)
	부 프레임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2 (10.5)	0 (0.0)	0 (0.0)	3 (4.3)
좌익세력대변	주 프레임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4 (21.1)	0 (0.0)	0 (0.0)	13 (18.8)
	부 프레임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

당국 대변	주 프레임	2 (28.6)	2 (40.0)	1 (100.0)	0 (0.0)	0 (0.0)	0 (0.0)	2 (20.0)	1 (14.3)	1 (33.3)	5 (26.3)	3 (42.9)	0 (0.0)	15 (21.7)
	부 프레임	0 (0.0)	1 (2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	1 (14.3)	0 (0.0)	1 (5.3)	0 (0.0)	0 (0.0)	5 (7.2)
도민 연민	주 프레임	1 (14.3)	0 (0.0)	0 (0.0)	0 (0.0)	1 (20.0)	0 (0.0)	2 (20.0)	2 (28.6)	1 (33.3)	5 (26.3)	3 (42.9)	0 (0.0)	13 (18.8)
	부 프레임	2 (28.6)	0 (0.0)	0 (0.0)	1 (100.0)	1 (20.0)	0 (0.0)	6 (60.0)	2 (28.6)	1 (33.3)	8 (42.1)	3 (42.9)	0 (0.0)	24 (34.8)
당국 찬양	주 프레임	0 (0.0)	2 (4.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부 프레임	2 (28.6)	4 (80.0)	0 (0.0)	0 (0.0)	0 (0.0)	1 (33.3)	0 (0.0)	1 (14.3)	2 (66.7)	2 (10.5)	0 (0.0)	0 (0.0)	12 (17.4)
주 프레임 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0 (100.0)
부 프레임 전체		7 (100.0)	5 (100.0)	1 (100.0)	1 (100.0)	5 (100.0)	3 (100.0)	10 (100.0)	7 (100.0)	3 (100.0)	19 (100.0)	7 (100.0)	1 (100.0)	60 (100.0)

주 프레임 : $\chi^2=130.598$, $df=77$, $p<0.000$

부 프레임 : $\chi^2=133.849$, $df=77$, $p<0.000$

주 프레임, 즉, 기사의 제목에서는 프레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식의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과 당국 관계자의 상황과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당국 대변’ 프레임이 각각 15건(21.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뒤이어 ‘자연·인문환경 소개’ 프레임 14건(20.3%), ‘좌익세력 대변’ 프레임 13건(18.8%), ‘도민 연민’ 프레임 13건(18.8%)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사 제목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에서 “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⁹⁶⁾”, “동란의 제주도사건 전모, 이도 부패가 원인⁹⁷⁾” 등의 제목이 사용되었다. ‘당국 대변’ 프레임에서는 “사건 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최고지휘관 뿌대좌 기자단에 답변-”⁹⁸⁾,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경비대가 말하는 인민해방군”⁹⁹⁾ 등이 있다. ‘자연·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에서는 “불요불굴 일하는 도민¹⁰⁰⁾”, “천여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숭고한 근로정신¹⁰¹⁾” 등의 제목이, ‘좌익세력 대변’ 프레임에서는 “그들의 요구는 통일정부 수립¹⁰²⁾”, “양민 살상은 거북한 일 감정적 동기였고 인젠 꿈에서 깬 것 같다/4·3

96) 『조선중앙일보』, 1948.06.13

97) 『서울신문』, 1948.07.20.

98) 『조선중앙일보』, 1948.06.08

99) 『조선일보』, 1948.06.09

100) 『자유신문』, 1946.12.08

101) 『서울신문』, 1946.12.19

사건의 막후 배문!!103)” 등이 있다. ‘도민 연민’ 프레임에서는 “무장경관 8백여, 날이 갈수록 살기창일104)”, “변모한 제주 3다, 10만 재민의 구호 긴급105)”, “총성은 멈췄으나 공포 속에 잠긴 도민들106)” 등으로 구분되었다.

부 프레임, 즉 기사 내용에서는 프레임 간 차이가 나타났다. 3·1절 발포사건과 4·3 등으로 고통 속에 사는 제주도민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거나, 구호를 호소하는 ‘도민 연민’ 프레임이 24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도민 연민’ 프레임에서는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공포와 회의의 빛107)”, “직접 살인 방화를 선동 교사한 외의 기계적으로 움직인 도민들을 처벌하지 말 것108)”,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다고 울부짖는가 하면109)”, “「그때 이 앞 신작로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수다. 피가 흘러가는 길이 OO이 젖고…」라고 말하는 부락민 가운데에는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노모가 우두커니 서 있다110)”와 같은 표현이 기사에서 담겨있다.

이어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이 19건(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사건 개요 전달’ 프레임에는 ‘국방경비대 제주도방면사령부 최경록 사령관’과 ‘김봉호 경찰청장’,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으로 귀순한 남로당 간부’, 당시 도지사 등을 만나 당시 사건 상황을 취재한 기사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일의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4월 3일 이후 6월 16일까지 피해는 소실가옥 421호, 양민사망 292명, 동 부상 98명, 납치 35명인데, 그중 피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악,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면별로 보면 한림, 조천,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111)” 등의 기사다.

‘당국 찬양(12건, 17.4%)’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다. “동족상잔이라는 누명과 비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갖은 고생을 겪어가면서 선구공작을 맹렬히 전개하였는데,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112)”, “오늘의 평화를 위하여 국군과 경찰에

102) 『조선중앙일보』, 1948.06.09
 103) 『경향신문』, 1949.06.25
 104) 『조선중앙일보』, 1948.06.12
 105) 『서울신문』, 1949.09.01
 106) 『서울신문』, 1948.07.11
 107) 『조선중앙일보』, 1948.06.10, 『서울신문』, 1948.06.11
 108) 『조선중앙일보』. 1948.06.11
 109) 『조선중앙일보』. 1948.07.11
 110) 『조선중앙일보』, 1948.07.23
 111) 『서울신문』, 1948.07.20

00명의 존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명기하여야 할 것¹¹³⁾”, “간곡한 대통령의 혼시는 큰 감명을 주었다¹¹⁴⁾”, “불과 4-5개월(만)에 적의 주력을 섬멸하고, 그 대부분을 포로로 하였고, 양과 같이 선량한 백성을 적의 독아로부터 구원하였다¹¹⁵⁾”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

극단적인 편향을 보인 ‘당국 찬양’ 프레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기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당국 찬양’ 프레임이 두드러졌던 언론사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국도신문』이었다. 『국도신문』은 북촌리 사건과 같은 토벌대의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인 1949년 3월 17일 창간하였다. 반공 투쟁에 대한 기조가 분명하였던 『국도신문』은 4·3에 대하여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국도신문』은 주 프레임 1건(‘자연·인문환경 소개’ 프레임)을 제외하고 ‘당국 대변’ 프레임과 ‘당국 찬양’ 프레임에 몰려있다. 심지어, ‘당국 찬양’의 제목(주 프레임)을 뽑은 유일한 언론이 『국도신문』이었다.

이밖에도, 당국의 좌익세력 토벌 활동에 대해 옹호하고, 찬양하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는 『경향신문(2건, 28.6%)』과 『동아일보(1건, 33.3%)』, 『자유신문(1건, 14.3%)』, 『조선일보(2건, 66.7%)』, 『조선중앙일보(2건, 10.5%)』 등 5곳이 있다. 모두 ‘부 프레임’에 ‘당국 찬양’ 프레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좌익부터 온건 우익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중립 노선에서 우익으로 변화한 언론사이며, 『조선중앙일보』는 좌익,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성향과 기사 내용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극우지 『국도신문』과 ‘좌익세력 비판’과 ‘당국 찬양’의 기사를 보인 『동아일보』, ‘도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국을 찬양하고 대변하는 『조선일보』만이 정치적 성향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나머지 『경향신문』, 『독립신문』,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 『국제신문』과 『동광신문』, 『현대일보』 9곳은 언론사 측 정치적 성향과 다

112) 『경향신문』. 1949.06.29
 113) 『국도신문』. 1949.04.22
 114) 『국도신문』. 1949.04.23
 115) 『국도신문』. 1949.04.21

른 프레임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좌익계열의 『조선중앙일보』는 좌익세력을 대변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동시에 당국을 찬양¹¹⁶⁾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혹독한 동란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도민에 대한 구호를 요청¹¹⁷⁾하는 기사를 쓴 신문사는 온건우익 성향(기사가 보도된 당시 성향)의 『서울신문』이었다.

우익계열의 『한성일보』는 ‘좌익세력 비판’ 프레임과 ‘당국 대변’ 프레임이 확인되면서도, ‘도민 연민’ 프레임의 기사를 쏟아내며 안타까운 현지 사정을 육지 독자들에게 알리려 노력하였다. 1950년 2월 16일 자 기사를 보면 “기자가 본 거로(巨老) 건설부락에는 약 200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는데 그네들의 주택이란 자기들 손으로 돌과 흙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얹는 지극히 간소한 것이며, 방은 바로 땅 위에서 짚, 초목, 낙엽 등을 펴놓고 기거하며 (중략) 대부분 고구마 세 개, 네 개로 살아간다 하니 그 형상을 비참하기보다 굶주림에 해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2월 17일 기사에서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구호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전국 애국애족 동포들의 한줄기 동정의 눈¹¹⁸⁾과 구호의 손길이 [○]어져야 할 것을 마음속으로 빌었[○]. 아무리 강건한 의지[○] 자력갱생의 길을 씩씩하게 걷고 있어^{○○} 새로운 건설은 새로운 자재가 필요하고 ^{○○}찬 노동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4·3 현장취재 기사 내용과 언론사 정치적 성향의 관계가 비교적 적다는 의미는 언론사의 논조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취제한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당시 언론이 당국의 토벌 활동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나, 양민 학살을 중단하고,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국 이슈로 끌어올리려 애썼던 기자들의 노력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116) 『조선중앙일보』(1948.06.09)는 “귀순권고에 혈서 반항-경비대의 양심적 행동을 호소-그들의 요구는 통일정보 수립”이라는 기사에서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경비대 장정들의 용모는 정사의 그것이다. 조국의 방비에 몸을 바칠 장정들!”이라며 당국의 토벌을 옹호하고 찬양하였다.

117) 『서울신문』. 1949.09.01

118) “○” 표기는 종이 인쇄가 뭉개져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3. 육지언론사의 시기별 현장취재 특성

당시 육지언론사가 변방의 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4·3과 4·3의 원인이 되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육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였는지 질적 연구를 통하여 깊이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육지 언론사 기자들이 제주에 어떻게 내려왔고,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였느냐는 것이다. 일부 기사에서 제주 현장 취재의 배경과 동기, 과정이 공개되었다.

『서울신문』 김영상 기자는 1946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김포 비행장에서 1시간 40분 만에 제주읍 서비행장에 내려 16일 오후 1시 30분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¹¹⁹⁾고 지면에서 밝혔다.

『자유신문』의 최 특파원은 1946년 12월 18일 자 신문에서 “8월 1일 30만 인구 밖에 안되는 동도가 도(道)로 승격된 것은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거나와 「미국이 군사기지를 만들었나 만들지 않았나를 보고와 달라」는 당국의 부탁과 아울러 해방 후 특히 도로 승격된 후 도내·외 상황을 살펴 일반의 공금을 풀기로 한다”고 내도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1947년 4월 2일 보도를 통하여 제주읍에 내도한 것은 3월 4일 새벽임을 밝히고, 자신이 제주에 내려온 이유에 대해 ‘이념’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1947년 3월 당시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반공’을 시대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내 이데올로기 열전이 한창이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이념과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설명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여 기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조선사람의 실생활면에서는 새롭고 꽤 심각하면서도 저속히 모호한 분류보다도 (중략) 조선과 조선민족의 앞날을 진정으로 근심하는 한 사람 조선인으로서의 수기다”¹²⁰⁾

또, 『경향신문』은 194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김영진 특파원의

119) 1946.12.18일 자 기사가 나온 당시 『서울신문』은 온건우익으로 정치적 성향이 분류되었다.

120) 『경향신문』. 1947.04.02.

현장취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6월 18일 아침 11시에 목포를 떠나 제주를 향한 정기선 충주환을 타고 기자단 4명이 제주도 산지포부두에 내렸다¹²¹⁾고 제주 입도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1949년 9월 1일 자 『서울신문』 신문에서는 “(8월) 28-29 양일에 걸쳐 장 내무 차관 일행과 함께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혹독한 동란을 겪은 제주도를 일주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추론은 일부 기사의 취재가 언론사의 순수한 지원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미군 또는 정부 관계자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현장취재 내용에 취재지원 기관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 부분은 경제적, 환경적 지원을 한 기관의 입장이 담긴 기사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장 취재를 지원한 기관이 기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에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들도 현장 취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졌을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현장취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1948년 당시 제주는 사회질서가 매우 혼란하고, 수만 명의 양민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 기자들은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자는 “총탄 아래를 헤매”었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오라리 교전’ 현장에서 총에 맞을 뻔한 상황을 넘겼다¹²²⁾고 밝혔다. 『한성일보』, 『조선중앙일보』, 『서울신문』은 “항상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국방경비대 장교 안내로 교전 지구를 거쳐 피해 당한 각 부락을 시찰하였다”고 전하였다¹²³⁾. 또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소란 제주도를 주야를 무릅쓰고 일주하였다”며 “중대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방경비대 출동부대를 따라 최전선으로 진출하였다”고 하였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격전지를 취재하였다는 의미다. 심지어 ‘철갑 군대 무장’을 하였다고 전하였다.¹²⁴⁾

당시 기자들은 미군정의 부탁으로 취재차 제주를 방문하였지만, 제주의 딱한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쓴 흔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제주의 경제

121) 『경향신문』. 1949.06.28.

122) 『동아일보』. 1948.05.07.

123) 『한성일보』. 1948.06.05. 『서울신문』. 1948.06.05. 『조선일보』. 1948.06.06.

124) 『조선중앙일보』. 1948.06.06. 『조선일보』. 1948.06.06.

사정은 좋지 않았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귀환 인구의 실직난, 미군정의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¹²⁵⁾ 일본을 왕래하던 뱃길이 중단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끊겨 경제 활로가 무너졌고, 유학, 구직 등의 이유로 일본으로 떠났던 제주인들이 귀향하면서 제주 인구가 급증해 경제난을 부추겼다. 이는 식량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제주도(島)가 제주도(道)도 승격된 것도 광복 이후 한반도 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육지언론의 제주 현장취재는 충분한 기삿거리가 되었다. 실제로 기자들은 정부의 도 승격 조치에 따른 제주민심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제주 여성과 근로자들의 근면성을 부각하는 기사 내용을 담아 제주인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언론사별 보도 시기와 기자명을 별도로 세분화해 들여다보면서 당시 누가, 어떻게 취재하였는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3기 보도 관련 언론사별 기자 이름

	보도일	언론사	기자명	비고
1	1948.04.27	독립신보	부제민 기(記)	
2	1948.05.07	동아일보	정선수 본사 특파원 발	
3	1948.05.08			
4	1948.05.09			
5	1948.06.03	현대일보	제주에서 이종선 합동 특파원 2일 발	
6	1948.06.04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7		한성일보	제주발	
8	1948.06.05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9		서울신문	제주도 조선	
10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통	
11	1948.06.06	조선중앙일보	제주도 조덕송 특파원=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일행 22명' 표기
12		조선일보	제주도 발 조통	
13	1948.06.08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	

12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3쪽

14	1948.06.09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
15		조선일보	제주도 발 조통	
16		서울신문	제주도발 조선	
17	1948.06.10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
18	1948.06.11	서울신문	제주도발 조선	
19	1948.06.10	조선중앙일보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9일발=합동	
20	1948.06.11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1	1948.06.12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2	1948.06.13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23	1948.06.22	동광신문	목포 일선 기자단 제공	
24	1948.07.11	서울신문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선	기사 내용이 같음.
25		조선중앙일보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	
26		한성일보	제주에서 조통 천 특파원 발	
27	1948.07.11	조선중앙일보	제주에서 천길봉 특파원 제공 조통	
28	1948.07.13	서울신문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선	
29	1948.07.20	조선일보	제주발 합동	기사 내용이 같음.
30		자유신문	제주도에서 서두성 합동특파원 19일발	
31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합동	
32	1948.07.20	서울신문	제주에서 본사 광주지국 조 기자 발	
33	1948.07.21	국제신문	제주도에서 서두성 특파원 20일 발 합동	
34	1948.07.21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오O인 특파원 발 조통	
35	1948.07.21	한성일보	제주도에서 천길봉 특파원 발 조통	기사 내용이 같음.
36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조통	
37	1948.07.23	조선중앙일보	제주발 조통	
38	1948.07.29	조선중앙일보	제주도발	기사 본문 내용 중 '대구 법조기자단 일행'
39	1948.07.30	조선중앙일보	일행	기사 본문 중 내용
40	1948.09.26	서울신문	수색에서 조덕송 발 조선	
41	1949.04.10	국도신문	제주에서 이병훈 특파원 발	
42	1949.04.10	자유신문	제주서 본사 이월준 특파원 8일 발	
43	1949.04.14	국도신문	제주에서 이병훈 특파원 발	
44	1949.04.15	자유신문	13일 제주서 본사 특파원 이월준 발	
45	1949.04.19	자유신문	본사 이월준 기자	
46	1949.04.21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47	1949.04.22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48	1949.04.23	국도신문	제주에서 본사 특파원 이병훈 기	
49	1949.06.25	경향신문	제주도에서 본사 특파원 김영진발	
50	1949.06.25	경향신문	기자	기사 본문 중 내용
51	1949.06.28	조선중앙일보	기자단 일행 4명	기사 본문 중 내용
52	1949.06.28	경향신문	본사 김영진 특파원 기	
53	1949.06.29	경향신문	본사 김영진 특파원 기	
54	1949.06.30	경향신문	제주도에서 김영진 본사 특파원 기(記)	
55	1949.09.01	서울신문	제주발 OO	표기 확인 불가
56	1950.02.16	한성일보	제주도 거로(巨老) 건설부락에서 광주지사 지영길 기자 발	
57	1950.02.17	한성일보	-	지영길 추정

<표 18>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가설을 내놓을 수 있다. 첫 번째, 언론사들이 ‘협력’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설이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기사를 본사에 송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생명의 안전과 취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취재 기자단이 취재내용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취재 관행 중에 공동취재(이하 풀, pool)라는 취재 방식이 있다. 특파원과 사진 기자, 기술자를 순번제로 묶어 취재단을 구성하고, 소수 기자들에게만 취재보도를 허용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자들에게 2차 적으로 기사를 배급해주는 보도 시스템이다. 즉, 취제한 기사 내용을 모든 기자에게 공유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걸프전 당시 미국 국방성은 군사기밀 유지를 위하여 기자단을 대상으로 풀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박현아, 2011).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내용이 거의 유사한 보도가 8회가 확인되었다. 일례로, 1948년 6월 6일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는 보면 기사 내용은 똑같고, 기자명은 각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조선’ ‘제주도 발 조통’이라고 표기되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기자단 일행’ ‘기자단 일행은 22명’ ‘제주발 합동’ ‘합동특파원’ 등의 단어가 확인되었다. 기자단이 함께 취제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가설은 ‘뉴스통신사’ 기사를 공동 인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1948년 6월 4일 같은 날 『조선중앙일보』와 『한성일보』는 각각 ‘제주도에서 조덕송 특파원 발 조선’과 ‘제주발’이라는 각기 다른 출처를 밝히고 같은 기사를 지면

에 실었다. 다음날인 6월 5일 『조선중앙일보』와 『서울신문』, 『한성일보』에서, 6월 6일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기자명이 다른 같은 기사를 확인하였다. 특히, 6월 6일 기사를 보면 내용에 ‘일행 22명’이라고 표기되어 제주 섬을 함께 누비는 기자 또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행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언론사가 다르고, 기사 내용이 같은 기사는 1948년 7월 말까지 두 달간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1948년 6월 6일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명을 다시 살펴보면 ‘조통’은 당시 뉴스통신사인 『조선통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통신』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일본의 관영통신인 『동맹통신』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자들이 『해방통신』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있던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9월 4일 종로 장안빌딩에서 창간한 통신사다. 온건우익으로 대변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이 소속된 만큼, 우익 성향의 통신사로 분류되고 있다.¹²⁶⁾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덕송’이라는 인물이 제주의 현장을 직접 보고 취재한 내용을 신문에 실었다는 점, 언론사의 정치적 노선과 상관없이 공통된 기사를 실었다는 점에서 4·3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49년대 이후부터는 본사 특파원이 직접 제주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하였다는 것이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1949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국도신문』에서 5건의 현장취재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특파원 이병훈’이 취재한 기사임을 밝히고 있다. 또, 『자유신문』은 1949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본사 특파원 이월준’이 3건의 현장취재를 보도하였다. 『경향신문』도 194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확인된 5건의 기사에서 ‘본사 김영진 특파원’의 기자명이 확인되었다.

둘째, 육지언론사는 제주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독자에게 전달하였나.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 기사에서 미군 통치로 인한 제주도민의 울분이 확인되었다. 『독립신보』 김호진 기자는 도민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 생생한 현지 민심을 육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보도 후 3개월 후에 있었던 1947년 3·1 발포사건의 배경과 연결되면서, 도민의 분노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독립신보』는 미군정의 미곡정책 실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고, 경찰의 이념적 편향과 모리 행위에 대한 지적 기사도 멈춤이 없었다.

126) 정진석, 앞의 책, 351쪽.

“어느 강연회 석상에서 어떤 사람의 강연 중에 “만주건국을 좀 먹는 이승만 김구 씨를 타도하자”고 말하자 어떤 청년이 “옳소”라였다 한다. 경찰당국은 이 “옳소” 한 마디에 8개월의 중역은 너무 억울하다고 정의를 사랑하는 이 섬 인민들의 억울하다는 표현이 이 “옳소 8개월”이다. 같은 강연회 석상에서 “매국자 박헌영을 죽이라” 한 데 대하여 역시 “옳소”한 사람은 즉시 경찰계에 등용되어 지금은 간부자리에 앉아 있다 한다. (중략) “쌀과 자유를 달라” “입법의원을 반대하다” 이런 뼈라를 가두도 아니고 인민위원회 사무소 벽에 붙여 놓았다고 여러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의 악질면장을 응징하였다 하여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또 모리배이고, 반역자인 먼장이 해방 후 또다시 등장하여 민중들의 원한을 촉발하여 굶주린 군중들은 그 집을 포위하여 쌀을 달라고 절규하자 경관이 출동하여 군중을 향하여 발포, 1명이 즉사하고 수명의 부상자, 64명이 구속되었던 사실, 기타 학교 선생들의 이유 근거 없는 체포, 몰수한 쌀을 경찰 관계 직원들이 분배하였다는 사건, 이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탄압과 체포, 행정기관의 비행은 유행되었던 것이다. (중략) 듣건대 미군정 당국은 제주도를 조선의 민주화의 시험장으로 하여 많은 시험을 하고 있다 한다. 만일 정의의 인민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탄압, 억압을 포기 않는 한 군정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30만 제주도 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절규하고 있다 “조선을 좀먹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악질경관을 숙척하라. 쌀과 자유를 달라. 진정한 인민에 대한 탄압을 포기하라.”¹²⁷⁾

2기에서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1947년 4월 2일과 3일에 걸쳐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 보고’라는 문패로 기사 2건을 보도하였다. 『자유신문』은 1947년 4월 3일 자의 ‘침울한 제주도-총파업 1주 후의 전세’라는 제목의 기사 1건을 실었다. 기사 작성자는 “제주읍에서 공립 특파원 발”이었다. 『제주신문』의 기사 (1947.03.26.)¹²⁸⁾로 볼 때 『공립통신』 진학주의 기사로 유추할 수 있다.

127) 『독립신보』, 1946.12.19.

128) 1947년 3월 26일자 『제주신보』는 “3·1사건 조사차 기자단 일행 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남선 일대에 파문을 던진 본도 3·1사건은 그 후 점차 중앙에 있어서도 사건을 중대시 하게 되어 그 진상을 조사하고자 언론인 7명이 24일 내도하였”다며 경찰감찰청, 1구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내도한 기자는 『경향신문』 이선구, 『독립신보』 고병순, 『공립통신』 진학주, 『호남신문』 김남중, 『민보』 남정준, 『조선통신』 서과열, 『목포신문』 정봉현 등 7명이다. 이후 3월 30일에 『제주신보』가 보도한 “기자단 일해 이도” 기사를 보면 기자단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6일 감찰청 차로 도일주차 읍내를 출발해 서귀포에서 1박을 하고 지방 실정

확인된 3건의 기사는 총파업의 원인과 갈등 봉합의 방법,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데 집중하였다.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취재를 통하여 확인된 이야기를 기사로 풀어냈다. 제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관이 과거 일본군처럼 도민을 킥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총부리를 겨누고 쏜 사실에 도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내 주민들의 무장경관에 대한 미묘한 외구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극히 부자연한 대조 가운데서 제주도는 우울한 그늘에 싸였으며 따라서 지난번 3·1불상사도 발생한 것”¹²⁹⁾

응원경찰과 제주도민이 대치상태의 상황에 대해 이선구 기자는 “어떤 순경은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하였다고 하고, 어떤 도민은 평온한 섬에 왜 응원경찰을 보냈느냐”고 지적하였다. 또, 응원경찰대에 대해 “남조선 소요사건의 피비린내 나는 참경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라며, 측은한 감정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응원경찰대의 심리적 특징을 담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립병원 사건’¹³⁰⁾을 설명하였다.

‘도립병원사건’이란, 응원경찰대원인 이문규 순경(당시 29세)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 순경은 3·1 발포사건에 앞서 2월 26일 트럭에 부딪혀 도립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경은 3월 1일 관덕정 부근에서 총소리를 듣고 병원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때렸다는 것이다. 피해 군중들은 관덕정에서 들린 총 발포 소리를 듣고 도립병원으로 피신하던 구경꾼들이었다. 나중에 이 순경은 병원 원장과 담담의사에게도 총부리를 겨눌 정도였다.¹³¹⁾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선구 기자는 이문규 순경의 상태를 “비극적인 심리상태”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선구 기자는 계획적인 경찰 습격 계획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며, 당시 도민의 입장과 심경도 전하였다.

을 조사한 다음 27일 서주로 읍내에 귀환해 각 방면을 조사한 뒤 3·1사건에 대한 일반여론 등을 청취하고, 여정을 마친 후 28일 『제주신보』를 내방 하였다고 한다. 출도는 28일에 하였다.

129) 『경향신문』. 1947.04.02.

130) 『경향신문』. 1947.04.03.

131) 『경향신문』. 1947.04.03.

“만일 민중이 경찰을 습격할 계획을 하였다면 그들은 좀 더 강력한 무장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며 또 아무리 발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이 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소량의 발포로써 혼비백산하여 흐터져 다러날리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 민간의 판단”¹³²⁾

3·1절 발포사건에 대해 『경향신문』 이선구 기자는 “경찰과 민중 쌍방의 과민한 심리적 대치 가운데 불행한 소지”라고 봤다. “기마순경이 군중을 뚫고 달리다가 어린애를 치어놓고 그대로 달려가니, 이를 본 관중이 꽤 씹하게 생각해 항의하였으나, 기마순경은 사과하는 빛이 없어 이에 격분한 군중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진데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발포경관 사형’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자 총파업이 단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총파업에 관 공리와 제주 출신 순경이 대규모로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선구 기자는 “서로가 친밀하게 가족적인 우의 가운데 굳게 결합”한 “제주의 특성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놀랄 것이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같은 소속 경찰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육지 독자들이 이해가 부족하였을지 모른다. 이선구 기자는 특유의 제주 공동체 분위기를 전해 총파업 사태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애썼다. 미군정 당국을 향해서는 “물적 증거와 더불어, 진상발표가 있어야 할 일”이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향신문』은 정치적 성향이 ‘중립’으로 분류되었다.

『자유신문』 역시 3·1 발포사건과 총파업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3월 18일 총파업이 일단락되었을 때, 제주도민의 피해 상황과 응원경찰대 파견 규모, 3·1절 발포사건의 주요 원인 등을 분석해 지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응원경찰대와 도민의 양쪽 입장과 상황을 분석하였던 반면, 『자유신문』은 사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사상자의 피해 규모와 근본적인 사건 발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즉, 사건의 피해자는 무고한 구경꾼, 즉 양민이었다는 이야기다.

“420여 명의 특경대가 육지에서 파견되어 각지에서 경계를 포진하고 있는데 (중

132) 『경향신문』. 1947.04.03.

략) 관덕정 앞 발포사건은 경관들이 살포한 38발로 16명의 사상자 생긴 것. 사상자의 시체급 신체를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전부가 배측으로부터 탄환을 맞은 것, 부상자는 전부 시위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었던 것, 사상자는 제1구서 앞이 아니고 반대측 식은¹³³⁾ 현관, 서장관사 현관 골목 안 등인 것, 시위군중은 전연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다 발포에 이를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당시의 목격자들의 담화를 종합한 결과다.”¹³⁴⁾

1948년 이후인 3기는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좌익세력의 봉기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당국의 진압과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수많은 양민이 학살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도내 무장봉기가 발발하였다. 4·3이었다. 350여 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였다.¹³⁵⁾ 당시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전남경찰 100여 명을 응원대로 제주에 급파하고,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를 설치하였다. 이어,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해안가를 봉쇄하였다. 특히, 김정호 사령관은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진압을 시작하였다.¹³⁶⁾

4월 24일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한국 섬 폭동 발발 46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4·3에 대한 첫 외신 보도다.¹³⁷⁾

4월 28일 제9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72시간 내 전투 중지 등에 합의하였지만, 5월 1일 일명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해 평화협상이 파기되었다. ¹³⁸⁾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제주에 전국 각지의 응원 경찰이 증파되고, 제주도 비

133) 3·1절 발포사건의 장소였던 관덕정 부근에 위치한 ‘식산은행’의 출입말.

134) 『자유신문』. 1947.04.03.

13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4쪽

13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쪽

13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쪽

13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0-551쪽

상 경비사령부가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1948년 11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 전역에 대통령령 제 31호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해 12월 31일 계엄령을 해제하였다.¹³⁹⁾ 그러나, 무장대와 토벌대의 교전은 날로 심화하였고, 양민학살은 더 잔혹해졌다. 대표적으로, 1949년 1월 17일 양민 400여 명을 집단 총살한 ‘북촌사건¹⁴⁰⁾’이 발생하였다. 4월 1일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9연대는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중산간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하였고,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만 5,000명이며, 게릴라들이 본토나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종합보고를 올렸다. 이처럼 사건의 급박한 전개 속에서 육지 언론의 현장취재 보도가 줄을 이었다.

당시 공산주의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독립신보』는 1948년 4월 27일 기사에서 4·3을 “과도기의 가열한 역사적 시련의 무대를 화하고, 단선단정 반대의 광범한 인민봉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일부 폭동의 선동’이라는 발표를 반박하였다. 『독립신보』는 “단선단정 반대가 투쟁이 중심 슬로건으로 계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단선단정을 대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인민이 결코 일조일석의 정치적 선정에 의해 동원된 것이 아니고, 8·15 아래 3년간 남조선을 유린한 반동 테러 지배의 가열한 시련”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당국의 탄압과 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도민이 봉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일보』는 4·3의 원인을 “공산계열의 선동모략” 보다 “도민의 감정악화”라고 지목하였다. 1948년 6월 13일 보도된 ‘제주도 현지보고-감정의 악화가 금반 사건의 도화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민여론의 종합보고’를 전하였다.

139)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54-555쪽

140) 1949년 1월 17일 해안 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칭 ‘북촌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아침에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그러자 흥분한 군인들이 북촌리를 불태우고, 주민 300여 명을 집단 총살하였다. 또한, 군인들은 살아 남은 주민들 중 함덕리로 소개해 간 북촌리 주민 100여 명을 또다시 총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이자, 대대장 차량을 운전하였던 김병석은 “이미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314쪽)

무력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였다.

“금번 사건의 도화선은 순전히 도민의 감정악화에 있다.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 서북계열의 사설청년단체가 필요하였던가. 경찰당국은 치안의 공적도 알리기 전에 먼저 도민의 감정을 ○발시키는 점이 일조하였다는데 고문치사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지 거리에 놓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굽으로 밟아 죽이고도 말 없는 순경에 도민의 눈초리는 매서워진 것이다. 직접 원인의 한 가지로 당국자는 공산계열의 선동모략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원인의 한 가지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33만 전 도민이 총칼 앞에 제 가슴을 내밀었다는 데에서 문제는 커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진정시키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는 당국자의 참으로 애족적 ○○와 현명한 시책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 광란을 통하여서 제주도의 참다운 인식을 하여야 되며 민심을 유린한 사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¹⁴¹⁾

하지만, 1949년 9월 1일 보도된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1년여 만에 4·3 논조가 달라졌다. 『조선중앙일보』는 “삶과 죽음이 교차된 몇만 이상의 숫자의 피를 제사 지낸 제주도야말로 (중략) 극동의 반공 보루로써 새로운 시험장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며 “8·15의 감격적인 해방으로부터 지난해 8·15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만 3년간의 확실한 정치의 진공상태였던 것이니 제주도민들도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4·3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4·3을 두고 “살인방화 복한 괴뢰 집단과의 연락 아래 이뤄진 사건¹⁴²⁾”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동안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논조를 담았다. 좌익계열 신문인 데다, 양민의 피해에 집중하였던 『조선중앙일보』에서 볼 수 없었던 논조였다. 당시 반공 이슈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온건우익 성향으로 분류된 『동아일보』는 『독립신보』의 인식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 무리를 ‘극좌분자’, ‘불온배’, ‘파괴분자’로 부르며, 그들의 폭력적인 활동이 4·3 발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제주도 양민의 피해 상황을 전하였다. 당시, 최경진 경무부 차장이 “원래 제주도는

141) 『조선중앙일보』. 1948.06.13.

142) 『조선중앙일보』. 1949.09.01

90%가 좌파색채를 가지고 있다”고¹⁴³⁾ 매카시즘적 발언을 한 것과 대조적인 시각이었다. 『동아일보』는 도민 전체를 좌익세력으로 보지 않았으며, 무고한 희생에 대한 연민을 현장 보도를 통하여 담았다. 『동아일보』는 1948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3회 걸친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라는 기사를 통하여 “도민 태반은 선량한 핏줄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며 “정부를 싫어하는 소위 무정부주의자는 있을망정 공산주의 정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좌익세력을 ‘불온배’, ‘과괴분자’로 부르며, 그들의 활동이 제주를 ‘싸움터’로 만들었다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총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에 다시 칼로 난자하고, 목을 베고, 심지어는 귀를 찢고 코를 꺾어버릴 뿐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찢르지 않으면 안 될 원한은 무엇인가”라고 무장대의 폭력적 행동을 부각하였다. 동시에 경찰이 무장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도민을 향한 폭력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48년 7월 20일, 『서울신문』은 4·3의 원인을 ‘관공리의 부패’로 지목¹⁴⁴⁾하였다. 내용을 보면 “행정경찰의 각 부문에 걸쳐 일부 외래인사들의 부정행위와 권력남용은 오랫동안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생활감정을 유린하였고, 이와 뇌동한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다”며 “그들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수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규정하고 몰수하였으며 수십년간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왜놈의 갖은 방해로 무릅쓰고 실어오면 세관들과 감찰서 항무청 기타 무수한 관철을 거처나오는 동안에 벌써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모조리 빨갱이로 지목돼 갖은 박해를 받아 왔다”며 도민의 억울함을 대변하였다. 이는 현재의 4·3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진상규명에 초점을 잘 맞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동광신문』은 1948년 6월 22일 보도에서 도민들이 무장대에 동요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거리로나 마을에나 눈에 띄는 건 여인네가 태반이고 사내라고는 늙은 이와 어린애들뿐”이라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도민들이 얼마나 소위 인민군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도 측에서 각종 각색의 변

143) 『한성일보』. 1947.03.13

144) 『서울신문』. 1948.07.20.

모로 민간에 출복해 불의의 습격을 다반사로 한다”며 “경찰의 신경과민한 고충도 엿볼 수 있다”고 경찰의 입장을 전하였다. 특히 『동광신문』은 무장대의 잔인무도 폭력적 행위를 상세히 전하며, 경비대가 무장대에 행하는 토벌의 정당성을 포장하기도 하였다.

셋째, 육지언론사는 당시 양민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육지언론사는 현장 보도를 통하여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무고한 양민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무고한 양민이 희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11일 보도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폭도와 경찰의 중간에서 통탄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폭도 측의 소위 책임자는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자는 대개 19세 내지 25세 정도의 청년들”이라며 “그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폭도 측에서 요구하는 자금이나 식량을 제공하면 경찰은 그들을 처벌하고,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기부금을 내면 폭도 측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중략) 제주도에는 지금 일대 복수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근본 원인을 적출 해결치 않고 무력 제압만으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국의 토벌 활동을 지적하면서 “외지에서 들어간 사설단체를 일체 해산시키고 제주 출신자도 신망있는 자를 치정책임 부서에 등용함으로서 도민의 감정을 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동아일보』는 1948년 5월 8일 기사에 “기자가 아는 상식과 용어로는 그 처참한 광경을 표현할 수 없으리 만큼, 비참하고 무자비한 살해사건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튿날인 9일 자에는 ‘오라리’ 교전 현장을 보도하면서 “경찰에서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아! 가없다! 제주도민은!”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한성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4일 보도를 통하여 “경찰과 경비대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제주읍은 밤이 되면 죽음의 거리로 화한다”며 “이 오름저 구석에서 남북의 이야기를 진동시키고 터지는 총성을 살기 찬 이 섬의 공기를 더욱 한층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튿날인 1948년 6월 5일 『한성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어느 부락이나 첫

인상은 비참”하였다며 “산에 들어갔다가 귀순한 부락, 경찰 측과 폭도 측의 중간 지대에서 공포에 싸여있는 부락, 그들은 모두가 백지처럼 묵묵하고 무표정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1948년 6월 6일 같은 날 “어느 한 마을이고 평온한 곳은 없다”며 “제주 전도에 걸쳐 한 군데도 전주가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고 (중략) 마을을 지날 때마다 소각된 경찰지서, 면사무소, 주민 가옥의 잔해가 이곳 저곳에서 험한 꼴로 나타난다”고 참혹한 상황을 보도하였다. 이어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가 나르고, 제일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그치지 않는다”며 “농번기인 제주에는 황금빛 같이 익어가는 보리가 그대로 말라가고 농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들판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고 처참한 참상을 전하였다.

『서울신문』은 1948년 6월 11일, 부락에 사는 도민을 인터뷰한 기사를 싣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을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다시 부락으로 돌아 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無し다. 눈앞에서 거두러들일 곡식을 두고도 무서워 밭에 나갈 수 없고, 산사람이 오면 또 언제 산에 올라가게 될런지!”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 고도에 옛날의 평화가 다시 오기를 원하지 않으리오. 누구보다도 도민 자체의 암담한 가슴이 이를 뼈아프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동광신문』은 1948년 6월 22일 보도를 통하여 “가장 참혹한 저지리 부락, 즉 산간지대의 250호 대촌인데, 120호가 깨끗이 회진화되고, 700명 화재민이 천막에서 가재도구 하나 없이 몸만 가리고 있는 참결은 기자의 가슴을 뼈아프게 찔렀다”고 전하였다.

『서울신문』과 『조선중앙일보』, 『한성일보』는 1948년 7월 11일 자 기사에서도 “처처에 절도된 전주는 그대로 밭고랑, 산등성이에 나자빠져 있건만 의연히 엄존하는 경찰지서 「바리케이트」만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며 “(한 도민이) 들고 있던 팽이를 돌 위에다 두드리면서 ‘죽을 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가 하면 공포와 울분에 북받친 60노파는 무어라 문표를 가리키며 가슴을 두드린다”고 말하였다. 붙어있던 집집 문표가 하룻밤에 없어지자 모든 부락민이 지서에 인치되어 난타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1948년 7월 13일 보도에서 “생계의 근원인 산을 잃은 채 눈앞에 떡을 두고도 먹지 못하는 고통에 도민의 생활고는 한결같다”며 “(도민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호적에도 없는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는 데는 질색하겠다’고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1948년 7월 20일 자 『서울신문』 보도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해 통행금지구역과 거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무장경관이며 관공서 주변에 돌로 쌓아올린 바리케이트 등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답답케 한다”며 “억센 파도와 싸우던 용감한 어부와 돌 많은 땅에서 곤란한 농사를 짓던 근면한 농부들은 모두 어디가고 주인 없는 어선만이 쓸쓸히 매어지고 잡초 우거진 밭고랑에 늙은 할머니의 한숨만이 서리는가”라고 전하였다.

또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7월 23일 기사를 통하여 무고한 제주 양민들을 학살하고 다녔던 토벌대의 행적을 고발하였다. 애월면 하귀리 소재 중학교 교원과 생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였다. 다른 기사에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눈앞에 선한 당시의 살상을 지금 얘기만 할러도 몸서리 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약 1개월 후에 경찰응원대가 폭도들을 소탕한다고 하여 70노인과 소학생까지 포함한 18명의 도민을 마을에서 사살하였습니다. 피살자 가운데는 경찰에 협력하는 사상을 가진 자도 있었으나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사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어린 두 학생이 그 당시 무참히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¹⁴⁵⁾

넷째, 당시 육지언론은 당국과 좌익세력의 상황과 입장을 어떻게 묘사하였나를 알아보았다. 특히, 4·3 연구 논문에서 지적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하였다(이관열, 2003)’와 같은 부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치 세력인 미군정과 군·경에 대한 묘사 부분을 집중 탐구하였다.

1949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병훈 기자가 쓴 『국도신문』의 현장취재 보도에서는 경비대와 경찰, 미군정의 활약상을 전하는 대변지의 면을 드러냈다. 또한,

145) 『조선중앙일보』. 1948.07.23.

무장대를 ‘적’, ‘극악분자’, ‘폭도’, ‘무장폭도’, ‘좌익세포’ 등으로 부르며, 이념적인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였다. 대표적으로 4월 21일 자 신문을 보면 “한국정부의 다 같은 민족이니 유혈을 피한다는 온정정책도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던 것”이라며 토벌대의 도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피투성이의 작전은 불과 4-5개월에 적의 주력을 섬멸하고, 그 대부분을 포로로 하였고 양과 같이 선량한 백성을 적의 독아로부터 구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함병선 중령에 대한 용모에 대하여 “한라산의 호랑이라기보다 온정에 넘친 인간”이라고 호평하였다. 함병선 중령은 일본군 준위 출신으로, 여순사건¹⁴⁶⁾을 진압하였으며, 4·3 기간 중에는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희생을 부른 북촌사건의 가해 부대인 2연대 소속 연대장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우상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국도신문』은 포로로 붙잡힌 무장대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그들이 “○회¹⁴⁷⁾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¹⁴⁸⁾하였다. 그러나 기자의 표현과 달리, 그들은 투지가 느껴지는 어휘를 사용하며 4·3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였다. 『국도신문』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포로들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무장대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제주폭동은 종래 행정당국 측의 강압에 싹이 텃으며, 작년 3·1절 시위행렬에서 경관 측 발포로 4-5명이 쓰러진 것에 한층 더 정숙하였다.”¹⁴⁹⁾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기자에게 전한 4·3 이후 종합적인 피해 실태도 『국도신문』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동란으로 죽은 사람이 아마 2만 명은 될 것이다. 주택은 11만 7,000호 중 무려 탄 것만 3만 3,500호, 도민의 유일한 생업인 가축 피해만도 4만 6,000마리, 전체 도민은 지나간 일 년간 생업을 잃었고, 5,000의 해녀도 20여 처의 대·소 공장도, 농토도 황폐

146) 1948년 10월 18일 제주해안이 봉쇄되었다. 해군은 7천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하였다. 또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증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9일 제주에 파병될 예정이었던 제14연대가 총부리를 돌려 반란을 일으켰다. 여순사건은 강경진압작전을 더욱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265쪽)

147) 글씨가 선명하지 못하여 확인이 어렵지만, ‘참회’로 읽으면 자연스럽다.

148) 『국도신문』. 1949.04.23.

149) 『국도신문』. 1949.04.23.

화하였다”¹⁵⁰⁾

『경향신문』 역시 군·경을 옹호하였다. 『경향신문』의 김영진 기자는 1949년 6월 25일 남로당 제주도장 부조직부장으로 활동한 김양근 등을 인터뷰한 기사를 신고, 후회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이 역시 “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알선으로 19일 아침 8시 제2연대 부연대 소장실에서 김양근을 위시한 인테리, 전국군속, 괴뢰군 등 8명의 포로와 10분간 좌담회”를 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군·경의 감시 아래 취재를 하였고, 보도한 셈이다. 그러나 “감정적 동기였고, 인젠 꿈에서 깬 것 같다”는 제목과 달리,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성의 대상이 봉기가 아니라 양민 살상에 대해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어떠한 성질의 지시였던가. ▲김단옥=그때그때의 전투방법의 지시였다. 주로 인민살상을 회피하라는 것이었다. ▲기자=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무자비한 양민의 살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김양근=거기 대하여는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전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뜻하지 않던 방향, 즉 인민 살상이라는 처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은 상상 외의 일이었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¹⁵¹⁾

『경향신문』은 토벌대의 섬멸전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양민 귀순자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귀순 권고차로 20일간 기한부로 한라산 폭도군에 파견하였으나, 그 후 소식이 묘연하게 되면서 (중략) 최후적 결의를 갖고 제3단계인 무력 소탕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함병선 중령의 인터뷰도 실렸다.

“섬멸전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이 느낀 것은 전투 후의 진압에 있어 가장 긴요한 것이 인민 계몽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국군이 주력한 것이 선무 공장이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의 효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8천 명이라는 대다수의 귀순자 획득이었다. 이들 귀순자를 42개소의 재건부락 수용소에 수용하여 이 중 34개소는 완전히 일반 민중과 동등 취급을 하기로 되어 지금 수용소에 남아있는 귀순자는 2천 명 밖에 안 된다. 하여간 동족상잔이라는 누명과 비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갖은 고생

150) 『국도신문』. 1949.04.23.

151) 『경향신문』. 1949.06.25.

을 겪어가면서 선무공작을 맹렬히 전개하였는데,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¹⁵²⁾

독자들에게 유격대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도 눈에 띈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한 제주도 재건을 지향하지 않을 때, 제주에는 또다시 뜻하지 않던 폭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였다.¹⁵³⁾

제주도내 참혹한 실상도 기사를 통하여 낱낱이 전달되었다. 『경향신문』의 현장 기사를 통하여 얻은 독자들의 인식이 어떠하였을지 짐작할 순 없지만, 기자가 직접 취재한 4·3 현장의 풍경이 담긴 것은 분명하다.

“이 무슨 처량한 풍경이나. 눈앞에 연달아 전개되는 폐허, 그것은 틀림없는 황우지다. 4만 여의 인명 살해와 수천여 호의 방화로 엮은 폐허 위에 소요 아닌 우마의 방향이 엿보인다. 태풍 일과 후의 평온. 이것이 제주도의 쓸쓸한 평화의 전모다.”¹⁵⁴⁾

“북제주읍 외도지서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으로부터 점차 불길이 퍼져 제주읍 등 기타 2, 3개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온 섬은 마침내 수라장으로 화하여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눈밭은 전투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인가는 소실되어 무고한 양민 또한 무수히 참살되어 제주도는 완전 민족상단의 활화산으로 화하여 버린 감이 없지 않다.”¹⁵⁵⁾

『조선중앙일보』는 앞서 설명한 언론사와 달리 유격대를 ‘산사람’이라고 부르며, 도민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였다. 1949년 6월 28일 보도의 첫 문장부터 4·3의 원인으로 시작하면서, 현장의 실상을 전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발생 관·경·민 충돌사건을 발화점으로 폭발한...(중략)...군·경의 감시 하에 ‘노력’하고 있는 「산사람」이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중략)...길가는 부인의 뒷머리에는 흰 땀방울이 많다...(중략)...불과 5-6세 가령 되는 애들이 누더기를 입고 굶주린 얼굴로 김을 매고 있는가 하면 12-13세 소녀들이 서까래 나무를 한다...

152) 『경향신문』. 1949.06.29.

153) 『경향신문』. 1949.06.30.

154) 『경향신문』. 1949.06.28.

155) 『경향신문』. 1949.06.29.

(중략)…어린 아동 또는 노인 등이 지나가는 차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그들이 받은 공포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었다”¹⁵⁶⁾

1949년 9월 1일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중앙일보』는 ‘동란에서 재건으로-그 후의 제주도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제주의 참혹한 실상을 전하고자 애썼다.

“남해의 고도 아니, 민족의 최남단에 자리를 잡은 한 때 일제의 도양 폭격기지로 온 겨레의 피와 땀을 앗아다가 골육의 성을 쌓던 제주도가 해방 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가열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혈전장으로 변호하여 버리고 만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중략) 삶과 죽음이 교차된 몇만 이상의 숫자의 피를 제사 지낸 제주도”¹⁵⁷⁾

또한, 미국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조선중앙일보』는 소년이 장난으로 던질 돌에 숨진 개구리의 우화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사태는 외국 기자에게 뉴스거리를 주려고 빚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자극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선동적인 기사의 난립에 대한 경고로도 보인다.

1949년 9월 1일 자 『서울신문』은 “대공투쟁의 전초기지로서 보다도 오히려 시험무대를 이루었던 이곳 제주도에는 일제의 억압 이래서도 볼 수 없었던 빈궁이 닥쳐왔다”며, 도민의 희생과 그에 따른 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어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생활을 재건치 않으면 안될 곤경에 놓였다”고 밝히며, 정부당국의 외면을 기사로 지적하였다.

“중앙에 요구하였던 29억 원의 제주도 부흥비는 겨우 9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말아 행정기관이나 군의 무상배급이 아니면 잠곡 한석 배급되는 2홉의 식량마저 살 수 없는 것이 참담한 도민들이 생활상”¹⁵⁸⁾

『한성일보』는 1950년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제주도민

156) 『조선중앙일보』. 1949.06.28.

157) 『조선중앙일보』. 1949.09.01.

158) 『서울신문』. 1949.09.01.

의 모습'이라는 기획 아래 '허물어진 옛터에 내 삶의 새로운 건설보'와 '부모 잃은 고독한 어린이 세대/시급한 구호대책 긴급' 등 기사 2건을 보도하였다. 이 2건은 4·3 피해로 잃어버린 마을의 모습을 기록한 현장기사로서, 단편적인 상황 보도가 아니라 주민들 곁에서 본 모습을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하듯 상황을 충실히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기자가 본 곳 거로 건설부락에는 약 200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는데, 그네들의 주택이란 자기들 손으로 돌과 흙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얹은 지극히 간소한 것이며, 방은 바로 땅 위에다 짚, 초목, 낙엽 등을 펴놓고 거기서 기거하며 부엌은 물론,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침실 겸 부엌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현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원시시대 인간들이 살던 생활상태를 방불케 한다. 그네들은 잡곡 혹은 고구마 죽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여 가는데, 그것도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먹으면 다행이라 한다.”¹⁵⁹⁾

그러나, 4·3의 가해자가 유격대, 즉 무장대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순진하고 소박한 도민을 선동시켜, 자기 민족을 스스로 이 비참한 구렁으로 함입시킨 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폭발처 반민족·반국가적인 악질 선동·과괴분자들의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크다”고 말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군 최고지휘관인 브라운 대령과 국방경비대 연대장인 최경록 사령관, 경찰청 김봉호 청장 등의 인터뷰다. 인터뷰를 통하여 도민을 대신해 당국의 입장과 상황을 물어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중앙일보』의 기자는 브라운 대령을 직접 만나 그에게 “이번 폭동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보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브라운 대령은 “원인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렸고, 『조선중앙일보』는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당시 4·3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인터뷰였다. 또한, 하곡수집 철폐 배경에 대해서는 지방 유지의 입을 빌려 “도민의 심리상태의 안정을 꾀한 것이라기보다 사실 탈곡식을 거두어드릴 농부가 없다는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159) 『한성일보』. 1950.02.16.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육지언론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을 비롯한 주요 사건과 사건 관계자를 취재한 현장 보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2개 언론사에서 지면에 보도한 69건의 현장 기사를 확인하였으며, 1946년, 1947년, 1948년 이후 시기를 3기로 나눠 시기별 변화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를 살폈다.

첫째, 좌익과 우익 계열 언론사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제주 4·3 의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1948년 4·3이 발발하기 전에는 주로 좌익계열의 언론사들이 제주를 방문했지만, 사건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 공산주의와 극우 계열의 신문들이 제주의 사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취재에 큰 공을 들였다. 당국의 정치적 성향이 우익으로 기울어 가던 시대적 상황도 있었지만, 제주 4·3 이슈에 대한 육지언론사의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둘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4·3 현장기사와의 관계성을 추적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 유형을 5가지로 나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관계성을 찾을 수 없었다. 좌익, 우익 계열 신문 모두가 군·경과 같은 ‘당국 관계자’의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당국 관계자’에 이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도민’의 말을 기사에 담고자 노력한 부분도 공통되게 나타났다. ‘당국 관계자’의 도움으로 제주를 답사하게 되었던 만큼, 당국 관계자가 주 정보원이 되었지만, 제주의 열악하고, 험악한 현지 실상을 본 기자들은 ‘일반 도민’을 부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일방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피해 당사자인 도민의 말을 육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성은 적었다. 전체 12개의 육지언론사 중 『국도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만 언론사 논조와 맞는 프레임을 보였고, 나머지 9개 언론사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프레임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좌익계열의 언론사가 우익 당국을 찬양하기도 하였고, 우익 계열의 언론사가 도민 구호를 요청하는 기사를 쓰기

도 하였다. 취재내용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가 적다는 것은 기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취재한 내용이 기사에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느 연구자들의 비판처럼, 현장취재 기사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보도되고, 미군정의 정치 선전도구와 메시저 기능에 충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기사들이 발견되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양민학살을 중단하고, 재건에 힘쓰고 있는 도민을 조명하며, 집 잃고, 가족 잃은 제주도민에게 관심과 구호를 촉구하던 기자들의 노력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무분별한 토벌을 벌이던 군·경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글이 등장하는 1949년대에 도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기사에 담겼다. 대부분 언론에서 무기력하게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과 달리, 기자가 직접 학살의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의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수만 명의 양민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급보도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기자를 파견해, 또는 직접 찾아가 현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가 있었다는 점 재평가가 필요하다. 1948년 4월 3일 4·3이 발발한 이후, 그달 27일부터 육지언론 기자들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려왔다. 무장하고 중산간 마을을 취재하거나, 오라리 방화 사건 후 교전 현장에도 육지언론 기자가 있었다. ‘기자단’의 이름으로 좌익, 우익 계열 신문사들이 ‘협력’하면서 현지를 취재하고, 본사로 송고하였던 것으로도 추정되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다만, 4·3의 원인을 바라보는 육지언론의 시각은 각기 달랐다. 3·1절 발포 사건 당시에는 현지 취재한 좌익계열의 『서울신문』과 『독립신보』는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도민들의 계획적인 경찰 습격이 아니었다고 보도하였고, 『자유신문』도 사상자 모두 시위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었다고 보도하면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경찰들의 발표를 반박했다. 하지만 4·3이 발발한 이후, 언론사별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 극명하게 갈렸다. 공산주의 성향인 『독립신보』는 4·3을 “단선단정 반대의 광범한 인민봉기”라며 이념과 관계없이 당국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도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온건우익 성향인 『동아일보』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좌익세력을 향해 ‘극좌분자’, ‘불온배’, ‘파괴분자’라고 부르며 폭력적인 활동이 4·3 발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4·3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언론사도 확인되었다. 줄곧 좌익계열로 분류되었던 『조선중앙일보』는 1948년 6월 13일 기사에서 “도민의 감정악화”를 4·3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1년여 후인 1949년 9월 1일에는 “살인 방화 북한 괴뢰 집단과의 연락 아래 이뤄진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심지어 토벌 활동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극우 계열의 『국도신문』은 당국이 무장 좌익세력을 토벌하기 위하여 양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으며 정당화하였으며, 우익 계열의 『경향신문』은 귀순을 권고하였지만 따르지 않아 무력소탕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국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무고한 제주 양민들에 대한 연민은 기사의 바탕이 되었다.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폭력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좌익과 우익 계열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온건우익인 『동아일보』는 ‘오라리’ 교전 상황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아! 가엾다! 제주도민은!”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온건우익의 『조선일보』와 좌익의 『조선중앙일보』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며 통탄하는 도민의 인터뷰를 실었다. 무고한 양민 희생이라는 대학살 사태 앞에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치 않았다.

현장취재 기사는 기자들의 파편된 기억으로 조작된 기사들의 짜깁기일 수는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중요하게 살펴 본 부분은 육지기자들이 직접 목격한 제주의 모습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당시 육지언론이 제주도민 전체를 빨갱이로 보아 소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 확인하였다. 당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국 속 자유롭지 못한 언론 환경 안에서 제주 양민학살의 참극을 알리고자 하였던 일말의 노력까지 낮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제주를 현장 취재한 육지언론사의 4·3 보도를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4·3 보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연구였지만, 그만큼 의미가 큰 작업이었다. 먼저, 참고문헌의 범위가 좁고, 오래된 자료만 남아있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조각조각

흩어진 옛 자료를 긁어모아 제주 언론의 출현과 4·3 당시의 언론 상황을 선행하면서 제주 언론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잘 시도되지 않았던 당시 보도 기사를 연구함에 따라 4·3 언론 보도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혔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4·3 당시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과 기사 내용에 대한 새로운 발견 역시 본 연구의 큰 성과다. 분석 대상이 69건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당시 보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스트레이트, 사실 등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4·3에 대한 육지언론과 육지 기자들의 인식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프레임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였다. 특정한 제목과 구문에 집중되어 있어 1건의 기사 안에 내포된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을 모두 살피는 것은 어려움이 따랐다. 마치 4·3을 어느 하나만을 특정하여 명칭을 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향후, 다중방법론, 심층 인터뷰, 콘텐츠 분석,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프레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또, 제주 언론 사료는 저자와 구술에 의한 2차, 3차 가공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향후 재논의와 재조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이치 카(E.H. Carr, 1961)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본 연구에 서술된 내용이 빈약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확장되고, 지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집·단행본

- 강준만(2019). 『한국 언론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고문승(1989). 『박헌영과 4·3사건』, 제주: 신아문화사
- 고영철(2019). 『제주언론 돌아보기 I』, 제주: 온누리디앤피.
- 김봉옥(2000).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 김영희(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188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백선기(1997).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상준(2000). 『제주도4·3사건 II』, 제주: 제주문화
- 양정심(2008). 『제주4·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
- 오정국(2013). 『현장취재에서 기사작성까지-미디어 글쓰기』, 서울: 아시아
- 유선영(1995). 『새로운 신문 기사 쓰기』,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윤임술(1983). 『한국신문백년지』, 서울: 한국언론연구
- 이문교(1998). 『제주언론사』, 서울: 나남
- 이민웅 (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지속』. 서울: 나남출판
- 정진석(1995). 『인물 한국 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2013), 『한국 신문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4·3은 말한다』, 서울: 전예원
- 제주신보(1995). 『제주신보50년사』, 제주: 제주신보
- 제주일보(2005). 『제주일보60년사-1945-2005』, 제주: 제주일보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1). 『제주4·3사건자료집-신문
편1』, 서울: 선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1). 『제주4·3사건자료집-신문
편2』, 서울: 선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2). 『제주4·3사건자료집-신문
편3』, 서울: 선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연구소 연구위원회(2002). 『언론을 통하여 본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제주
 4·3신문자료집 I 1988-1992』, 제주: 제주4·3평화재단
 채 백(2015). 『한국 언론사』, 서울: 컬처룩
 최 준(1990). 『신보관-한국신문사』, 서울: 한만년
 한겨레신문사(1992).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Ⅱ』, 서울: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사(1992).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Ⅲ』, 서울: 한겨레신문사
 E.H.Carr(2021, 역자 김택현). 『역사란 무엇인가(24쇄)』, 서울: 까치글방

2. 연구논문

강철수, 윤석년(2010).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학연구, 10(4), 5-39.
 고명철(2014).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장편시집 『니이가타』의 문제의식-분단과
 냉전에 대한 ‘바다’의 심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8, 495-522.
 고영철(2012).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3), 37-78.
 고영철(2013). 캠페인 관련 뉴스 프레임 및 뉴스정보의 출처에 관한 연구 : 국내
 5대 일간지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
 뮤니케이션 연구, 30, 187-250.
 고영철(2020).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가?-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과 인민
 군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빼라인쇄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
 구, 54(0), 141-198
 고창훈(2004).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 섬사람들의 시각 -. 지방정
 부연구, 8(2), 123-140.
 김광우(1993).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
 공정책대학원, 1993. 서울
 김동윤(2020).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 -오кина와·타이완·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

- 과 반(反)폭력의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70(70), 7-40.
- 김소희(2014). 신문 기사의 주제에 따른 언어적 특징과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춘수(2014). 1946-1953년 계엄의 전개와 성격.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 김학동(2007). 김석범의 한글 『화산도』론 - 한글 『화산도』의 집필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62(1), 17-34.
- 김학동(2018). 김석범(金石範)의 비(非) '4·3문학' 작품과 조국에 대한 애증의 형상화 양상 - 『죽은 자는 지상으로(死者は地上に)』와 『과거로부터의 행진(過去からの行進)(上·下)』을 중심으로 -. 日本學(일본학), 46, 133-155.
- 김희주(2022). 근대 초기 한국의 지역신문 연구 - 『경남일보』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74(0), 9-30. 10.15711/WR.74.0.1
- 박선희(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분석. 정치정보연구, 5(1), 209-248.
- 박찬식(2007).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30(0), 147-183.
- 박현아(201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군 공보활동에 관한 연구 : 군사작전 보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 논문
- 서유림(2019). 제주 4·3 기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 손지연(2015).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1, 7-32.
- 송정민, 한 선(2005). 5·18 신문사진의 의미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 조선일보와 광주일보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5(1), 117-149.
- 신은제(2016). 제주의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 : 소수자(지방)의 기억술. 역사연구, 30, 149-183.
- 양정심(1998). [연구동향] 제주 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역사와현실,27(),247-261.
- 양정심(2006).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사람(성대사람), 25(0) : 275-305
- 양정심(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 37(), 270-306.
- 유세경·이 석·정지인(2012). 중국 일간지의 “한류”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2-226.
-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읽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3-39.
- 윤정란(2018). 한국 반공주의와 그리스도교 -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가톨릭 평론, 14, 29-37.
- 이경아(2011).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론.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도
- 이관열(2003).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사회과학연구,42(),60-74.
- 이그나즈 아니타(2016).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제주도
- 이기세(2011). 현기영 소설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서현, 고영철(2013). 지역일간지에 나타난 제주지역 공기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3), 419-460.
- 이서현, 고영철(2016). 언론보도에 반영된 지방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소나무재선충병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1), 209-262.
- 이서현, 최진봉(2017).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 제주지역 폭설재난에 대한 프레임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1), 28-55.
- 이연숙(2007).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탐라문화, 31, 43-61.
- 이재원(2008). 신문기사 제목과 본문사이의 텍스트언어학적 전략들. 언어와 언어학, 41(0), 185-204
- 이주미(2005).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화인(火印)의 기억과 역사의식. 현대소설연구,(26), 237-254.
- 이준용, 김성희(2018). 미세먼지 재해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62(4), 125-158, 10.20879/kjics.2018.62.4.004
- 정민혜(1985). 南勞黨의 赤化戰略에 關한 研究 :4·3事件과 關聯하여 /鄭敏惠.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 정용복(2020). 언론은 제주4·3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 보수지와 진보지, 지역지

- 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399-439.
- 조 박(2021). 환경재난 보도 프레임 연구: 한·중 신문의 미세먼지 보도분석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제주도
- 조수일(2010). 김석범(金石範) 초기작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상윤(2007).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군사, (62), 241-271.
- 조유정(2019). 제주4·3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서울
- 주정홍(2019). 한국의 계엄사례 분석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서울
- 진명지, 안가영(2023). 코로나19 백신 이슈에 대한 신문 사설의 뉴스 프레임 연구. 사회이론, 299-343, 10.37245/kjst.2023.05.63.299
- 최낙진(2020). 책,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 57-81.
- 함옥금(2004). '제주 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도
- 허수정(2013). 제주 4·3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서울
- 허영선(2007). "제주4·3시기 아동 학살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濟州大學校 大學院, 제주도
- 허호준(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제주도
- 현수성(2019)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하여 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제주도
- 홍승혜(2017). 유령의 귀환-〈거듭되는 항거〉의 제주 4.3 다시 보기-. 한국학연구, 46, 173-200.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PP. 51~58.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ffman, E(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yengar, S(1989). How citizens think about national issues: A matter of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878-900.

Iyengar, S(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ers, W. L(1964). The Mass Media, New York , Harper& Row

Sigal, L. V(1973). Reports and Officials. Lexington, MA: D.C. Heath

3. 신문·잡지

『경향신문』, 『국도일보』, 『국제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제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일보』, 『한성일보』

4. 누리집

나무위키(namu.wiki)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www.nl.go.kr)

예스24(www.yes24.com)

제주도청(www.jeju.go.kr)

제주의소리(www.jejusori.net)

제주4·3평화재단(jeju43peace.or.kr)

제주4·3평화재단 아카이브(43archives.or.kr)

Analysis of On-the-Scene Coverage of Jeju 4·3 by ‘Mainland Press’

IEE SO-JIN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mainland journalists perceived the Jeju April 3rd Massacre and Uprising (Jeju 4·3) and conveyed it to readers by examining articles that were covered and reported by mainland press upon observing the sites of Jeju 4·3.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 12 press outlets that published Jeju reportages and 69 articles, released between late 1946 and 1950 and confirmed to have been covered using on-the-scene reporting method. Pre-1948 periods, before the outbreak of Jeju 4·3, were included as subjects of the study to conduct a multilevel analysis on how views of mainland press outlets changed by exploring their views on events that triggered and provided the background to Jeju 4·3. The study focuses mainly on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politically neutral or left-wing newspapers visited Jeju for on-the-scene coverage between 1946 and 1947. Following the outbreak of Jeju 4·3 in 1948, various press outlet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inclination such as left or right, sent correspondents to Jeju. This shows that Jeju 4·3 was addressed as an important agenda by the mainland press. Second,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any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mainland press outlets and informants provided in the articles. Both right- and left-wing press outlets referred to ‘authorities’ such as the military and police as key informants. Third, many articles included content that did not match the publishing press outlet’s political inclination. Some articles aligned with press outlets’ political stances, but there were also articles that did not. For example, left-wing press outlets praised punitive forces, and right-wing press outlets appealed for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s. In particular, left- and right-wing press outlets sometimes published articles with the same

content. In conclusion, although the mainland press cannot be immune from criticism due to their actions speaking for, even praising, the punitive actions of authorities during Jeju 4·3,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journalists strived to convey the situation of innocent Jeju civilians to mainland readers.

Key Words : Jeju, 4·3, mainland press, on-the-scene coverage, press release